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북한사회변동 2017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목차

제1장 /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10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12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6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27

제2장 /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1. 서론	32
2. 주민의 의식주 생활	34
3. 북한주민의 가계생활과 가족생활	50
4. 주민생활과 정보화	62
5. 결론	70

제3장 / 경제의 시장화와 사회적 분화

1. 서론	74
2. 경제의 시장화	76
3. 경제적 계층 분화	82
4.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86
5. 평가 및 시사점	89

제4장 /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1. 서론	94
2. 북한 사회보장 제도 실태	96
3. 북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108
4. 평가와 시사점	113

제5장 / 총론

부록 / 설문지	124
----------	-----


표목차

〈표 1-1〉 조사의 표본	12	〈표 2-10〉 사용해본 남한 물건의 종류 - 중복 응답 (2014~2017)	54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15	〈표 2-11〉 가정 내 의사결정 : 성별 응답 비교	57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16	〈표 2-12〉 사교육 내용 (1순위 기준)	58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18	〈표 2-13〉 자녀 사교육 경험과 탈북직전 생활수준 (2014~2017)	59
〈표 1-5〉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20	〈표 2-14〉 북한 거주 시 일상 고민	60
〈표 1-6〉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21	〈표 3-1〉 소득을 얻는 주요 수입원	78
〈표 1-7〉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22	〈표 3-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기간	78
〈표 1-8〉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23	〈표 3-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사용한 상품 및 원부자재 출처	79
〈표 1-9〉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4	〈표 3-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가족 이외 타인 고용 여부	80
〈표 1-10〉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25	〈표 3-5〉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가족 이외 타인 고용 규모(연간 평균)	81
〈표 1-11〉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26	〈표 3-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 (1순위)	82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26	〈표 3-7〉 전체 수입 중 뇌물의 비중	82
〈표 2-1〉 주식의 구성	36	〈표 3-8〉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1순위	83
〈표 2-2〉 고기 섭취 횟수	37	〈표 3-9〉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2순위	83
〈표 2-3〉 의류의 구매 횟수	39	〈표 3-10〉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3순위	84
〈표 2-4〉 의류의 원산지	42	〈표 3-11〉 우선적 상거래에 대한 인식	85
〈표 2-5〉 의류의 주요 구입 경로	43	〈표 3-12〉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1순위	86
〈표 2-6〉 살림집 유형	45	〈표 3-13〉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2순위	87
〈표 2-7〉 교차 분석 : 탈북직전 생활수준별 살림집 형태 (2012~2017)	46	〈표 3-14〉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인식	88
〈표 2-8〉 살림집 장만 경로	48	〈표 4-1〉 무상치료의 적용여부 (2017년)	97
〈표 2-9〉 교차 분석 : 탈북직전 생활수준별 살림집 장만 방법 (2012~2017)	50	〈표 4-2〉 노령연금(년로연금)의 수급 경험	101
		〈표 4-3〉 노령연금의 작동여부	102
		〈표 4-4〉 노령연금의 대상별 지급여부 (2017년)	103
		〈표 4-5〉 공로자연금의 수급 경험	104
		〈표 4-6〉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의 수급 경험	106

〈표 4-7〉 폐질연금의 작동여부 (2017년)	106
〈표 4-8〉 폐질연금의 대상별 지급여부 (2017년)	107
〈표 4-9〉 북한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109
〈표 4-10〉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110
〈표 4-11〉 북한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111
〈표 4-12〉 북한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112
〈표 4-13〉 각 영역별 만족도 비교	113

그림목차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35
〈그림 2-2〉 고기 섭취 횟수	38
〈그림 2-3〉 의류의 구매 횟수	40
〈그림 2-4〉 살림집 유형	46
〈그림 2-5〉 살림집 장만 경로	49
〈그림 2-6〉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51
〈그림 2-7〉 가계소득의 주요 지출내역 - 계층별 (2017)	52
〈그림 2-8〉 남한산 물건 사용 경험	54
〈그림 2-9〉 가정 내 의사결정	56
〈그림 2-10〉 자녀 사교육 경험	58
〈그림 2-11〉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	64
〈그림 2-12〉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계층별	65
〈그림 2-13〉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교육수준별	66
〈그림 2-14〉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연령대별	66
〈그림 2-15〉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남한과의 접촉 경험 여부	69
〈그림 3-1〉 공식적인 직업	77
〈그림 3-2〉 영역별 자유보장에 대한 인식	85
〈그림 4-1〉 2016년~2017년 사회보장 만족도와 2017년 영역별 만족도	114



제1장
연구 개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1장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는 권력 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북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 모색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층 사회에서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일상생활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변화를 포함해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

며,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그리고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등장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 변화가 어떤 미래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변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일 것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의 중요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연구의 장애물들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기준 약 3만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북한사회변동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사회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를 설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지역별 생활수

준, 정보화, 시장화의 양상, 경제행위의 다양성,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¹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할 때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또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1-1〉 조사의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 탈북연도	2012 4/6-6/2	2013 6/13-7/16	2014 5/20-7/7	2015 5/22-7/6	2016 6/10-8/8	2017 6/8~8/6
201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132
총 계	127	133	149	146	138	132

1. 2017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IRB No.1706/001-012)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려면 탈북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2017년에 입국을 했더라도 정보의 부족 또는 왜곡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보다 2016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실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탈북과 입국 시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억과 의식의 변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표본의 구성을 조사연도 직전 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즉, 2017년 조사의 표본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탈북한 후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다.

이처럼 조사 표본의 탈북연도를 제한함으로써 표집 과정과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모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동일한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입국자는 2,401명, 2011년 입국자는 2,706명, 2012년 입국자는 1,502명, 2013년 입국자는 1,514명, 2014년 입국자는 1,397명, 2015년 입국자는 1,275명, 2016년 입국자는 1,418명, 2017년 입국자는 1,127명(잠정)이다.²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2. 통일부, “통계자료-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검색일:2018년2월22일)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 연구원이 직접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전국의 하나센터 등 관계기관들 외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례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6년 동안 여섯 차례 실시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시계열적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의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실태, 정보·통신 환경 실태, 시장경제 활동과 소득 실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 실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표 1-2>와 같다.

2017년 조사에서는 사회보장 실태와 범주의 세부사항을 추가하였다. 사회보장 만족도와 함께 노령연금, 국가공로자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의 수급 여부와 종류, 그리고 폐질연금의 정상지급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취업형태, 임금수준, 근로일수 및 시간 등 고용노동실태에 관한 항목 또한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범 주	설문내용	
의식주, 정보·통신환경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식사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의류 구매 횟수 의류원산지 의류 주요 구매처 인터넷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림집 형태 살림집 장만경로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살림집 장만 시기 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 소유한 정보통신 기기 인터넷 이용 장소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 지역의 빈부격차 직업의 빈부격차 월 평균 지출비용 빈부격차의 발생요인 일상생활의 고민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 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 수입의 주요 지출내역 식생활 형편 사교육 경험과 분야 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입 원천 자재/원료의 원산지 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 고용노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화의 대상 경제침체의 이유 국가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 소비 행동
사회보장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만족도 국가공로자연금 수급 여부 노동능력상실연금 수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령연금 수급 여부 폐질연금 수급 여부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 성별, 연령별, 탈북-입국기간의 특징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의 여성 비율은 그보다 낮다.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율이 2017년 약 47%, 2016년 62%, 2015년 61%, 2014년 66%,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5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40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자료의 연령대별 입국 현황에서 2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대	0 (0.0)	0 (0.0)	1 (33.3)	2 (67.7)	2 (66.7)	1 (33.3)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20대	22 (51.2)	21 (66.7)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30대	11 (47.8)	12 (52.2)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40대	10 (32.3)	21 (67.7)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0대	6 (35.3)	11 (64.7)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연령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60대 이상	7 (53.8)	6 (46.2)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합계	56 (44.1)	71 (55.9)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rounding-error)에 해당한다. 2011년과 2012년 조사의 연령대에 대한 코딩 오류 정정으로 연령대 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전체는 2011년에 탈북하여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2012년에 입국하였으며 2명은 2013년에 입국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149명 전원이 2013년에 탈북하여 이 중 141명이 2013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8명은 2014년에 입국하였다. 2015년 조사에는 전원이 2014년에 탈북하여 이 중 129명이 2014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17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135명이 2015년에 3명이 2016년에 탈북 하였다. 이 중 99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으며 39명이 2016년에 입국하였다. 2017년 조사의 경우 2016년도에 탈북 한 조사대상 132명 중 19명만이 2017년에 입국하였다.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연도 소요기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개월 미만	0.0	0.0	3.4	0.0	1.4	1.5
1개월	1.6	0.0	26.8	30.8	21.0	27.3
2개월	18.1	29.3	48.3	29.0	22.5	32.6
3개월	48.8	47.4	8.1	14.4	15.2	12.1
4개월	14.2	8.3	2.0	6.8	14.5	8.3
5개월	6.3	5.3	4.7	2.1	15.2	8.3
6개월	4.7	1.5	2.7	1.4	2.9	2.3
7개월	0.8	3.8	2.0	0.7	1.4	0.8
8개월	2.4	1.5	1.3	0.0	0.7	3.8
9개월	0.8	0.8	0.7	1.4	1.4	2.3
10개월	1.6	2.3	0.0	3.4	0.7	0.0
11개월	0.8	0.0	0.0	0.0	1.4	0.8
무응답	0.0	0.0	0.0	0.0	1.4	0.0
평균(개월)	3.57	3.37	2.26	2.49	3.33	2.82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응답자들의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평균 3.57개월(표준편차=1.74), 3.37개월(표준편차=1.72), 2.26개월(표준편차=1.61), 2.49개월(표준편차=1.99), 3.33개월(표준편차=2.353)이었다. 2017년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탈북-입국 기간은 2.82개월이었고 표준편차는 2.116이었다. 달리 말하면

2017년 조사대상자의 81.8%가 탈북 후 입국까지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과 2016년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각각 82.7%, 76.7%, 86.1%, 84.2%, 60.1%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 안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고향, 학력, 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 탈북하기 전 최종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으로, 2017년도 의 경우 이들 지역 출신은 88.6%에 이른다. 통일부 자료(2017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함경북도 출신이 60.9%, 양강도 출신이 15.3%, 함경남도 출신이 8.8%이다. 모집단 자체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양강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양강도 출신의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최근의 탈북 행위가 구조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양	0	1	3	3	5	2
개성	0	0	0	0	0	1
남포	1	0	2	1	2	1
평안남도	0	2	4	3	2	0
평안북도	1	6	0	3	1	1
함경남도	14	11	9	5	4	6
함경북도	65	51	53	64	58	33
자강도	0	0	1	0	0	0
양강도	39	58	72	60	63	84
황해남도	3	0	1	1	0	4
황해북도	3	1	2	4	0	0
강원도	1	2	2	2	3	0
무응답	-	-	-	-	-	-
합계	127	133	149	146	138	132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2012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65.4%, 71.4%, 61.7%, 61.0%, 74.6%, 72.0%가 고등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약 10.2%, 16.5%, 13.4%, 19.9%, 13.0%, 7.6%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재북 학력 현황을 보면 고등중학교가 69.8%, 전문대 9.6%, 대학 이상 6.9%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통일부의 전체 모집단에 비

해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2017년의 조사에서는 대학교 출신 응답자 비율이 7.6%로 전년도 조사에 비하여 통일부 전체 모집단에 근접하였다.

〈표 1-6〉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단위: %)

교육수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학교	10.2	16.5	13.4	19.9	13.0	7.6
전문학교	18.1	11.3	21.5	16.4	11.6	17.4
고등중학교	65.4	71.4	61.7	61.0	74.6	72.0
인민학교	3.2	0.0	2.0	2.1	0.7	2.3
무학	1.6	0.8	0.0	0.7	0.0	0.8
무응답	1.6	-	1.3	-	-	-
전체	125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응답자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재북 직업이 노동자였다는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각각 37.0%, 31.6%, 30.9%, 26.2%, 22.5%, 43.9%로 2017년 노동자 출신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가정부인, 장사, 사무원의 비율은 매년 73.6%, 75.2%, 74.3%, 72.4%, 68.1%였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74.2%로 집계되었다. 전문가나 외화벌이 일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1-7〉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동자	37.0	31.6	30.9	26.0	22.5	43.9
농민	8.7	3.8	7.4	4.8	9.4	3.8
사무원	4.7	9.8	12.1	8.9	10.9	6.1
전문가*	7.1	8.3	3.4	5.5	7.2	7.6
학생	6.3	6.0	7.4	4.8	4.3	2.3
군인	3.9	4.5	4.7	4.8	8.0	5.3
외화벌이 일군	2.4	2.3	0.0	4.1	2.9	3.8
장사	11.1	13.5	4.7	20.5	12.3	9.8
가정부인	11.1	16.5	18.8	11.6	13.0	10.6
무직 및 기타	6.3	3.8	10.1	8.2	9.4	6.8
무응답	1.6	-	0.7	0.7	-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 전문가에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이 포함됨

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다는 응답자들은 2012년 이후 각각 84.3%, 85.7%, 85.2%, 81.4%, 81.2%, 80.3%로 조사되었다. 2012년 조사대상자 중 당원이라고 응답한 18명의 직업은 노동자 7명, 사무원 2명, 군인 3명, 그 외 전문가, 학생, 외화벌이 일군,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고 무직 혹은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1명이었다. 2013년 조사 대상자 중 당원 19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사무원 6명, 노동자 5명, 전문가 2명, 군인 2명, 농민, 학생, 장사,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다. 2014년에는 노동자 7명, 사무원 4명, 군인 3명, 학생 2명, 농민, 전문가, 장사, 가정부인 등

각 1명씩 총 20명이 당원이었다. 2015년에는 노동자 10명, 사무원 5명, 전문가 4명, 군인 2명, 외화벌이 일군 1명, 장사 2명, 가정부인 2명 총 26명이 당원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노동자 5명, 농민 3명, 사무원 8명, 전문가 1명, 학생 1명, 군인 5명, 가정부인 3명 총 26명이 당원이었다. 올해 2017년 조사 결과 전체 당원 24명 중 노동자 11명, 농민 1명, 사무원 3명, 전문가 2명, 학생 2명, 군인 3명, 외화벌이 일군과 가정부인 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원	14.4	14.3	13.4	17.9	18.8	18.2
후보당원	0.0	0.0	0.7	0.7	0.0	0.8
비당원	84.3	85.7	85.2	81.4	81.2	80.3
무응답	1.6	-	0.7	0.7	-	0.8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 친척의 유무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이동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북 후 북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2012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이전과는 다른 양상

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2012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감소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 증가한 양상을 보였지만, 2016년과 2017년 조사에서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19.7%, 2013년 22.6%, 2014년 24.8%, 2015년 19.3%, 2016년 26.1%, 2017년 20.5%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2년 21.3%, 2013년 20.3%, 2014년 17.4%, 2015년 25.5%, 2016년 23.2%, 2017년 23.5%로 조사되었다.

〈표 1-9〉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9.7	22.6	24.8	19.3	26.1	20.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9.1	57.1	57.7	55.2	50.7	56.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1.3	20.3	17.4	25.5	23.2	23.5
무응답	-	-	-	-	-	-
전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하기 전 남한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2년 62.2%, 2013년 65.4%, 2014년 69.1%로 지속 증가 후 2015년 41.8%로 감소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60.9%로 증가하여 이진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7년 재차 51.5%로 감소하였다.

〈표 1-10〉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단위: %)

남한 친척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없다	37.8	34.6	30.9	58.2	39.1	48.5
있다	62.2	65.4	69.1	41.8	60.9	51.5
무응답	-	-	-	-	-	-
전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10〉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묻는 항목에는 결혼(동거 포함), 미혼, 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다. 이혼한 북한이탈주민들도 9.0%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미혼이 30.9%, 결혼이 55.0%였다. 2015년에는 미혼이 더욱 증가하여 39.0%였으며, 결혼은 42.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7.8%로 증가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도 미혼이 증가하여 42.0%였으며, 결혼은 47.1%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이혼은 2015년보다 감소하여 10.9%였다. 2017년의 조사에서는 미혼과 결혼이 각각 40.2%, 45.5%로 2016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혼의 경우 13.6%로 2012년 대비 4.1%가 증가하여 그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1〉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상태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혼	45.7	37.6	30.9	39.0	42.0	40.2
결혼 (동거포함)	44.1	53.4	55.0	42.5	47.1	45.5
이혼	9.5	9.0	14.1	17.8	10.9	13.6
무응답	0.8	-	-	0.7	-	0.8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응답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수를 조사하였다. 〈표 1-1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47.3%, 2013년 56.4%, 2014년 57.0%, 2015년 56.8%, 2016년 52.1%, 2017년 55.3%의 응답자들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각각 12가구이며, 2014년 조사에서는 19가구, 2015년 조사에서는 26가구, 2016년 조사에서는 13가구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가 18가구였다.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자녀의 수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명	24.4	38.4	34.2	39.7	43.5	43.2
1명	27.6	32.3	27.5	35.6	33.3	36.4
2명	19.7	24.1	29.5	21.2	18.8	18.9
3명	7.1	4.5	6.7	2.1	4.3	0.8

자녀의 수	조사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명	1.6	0.8	1.3	1.4	-	0.8
무응답	19.7	-	0.7	-	-	-
전 체	127명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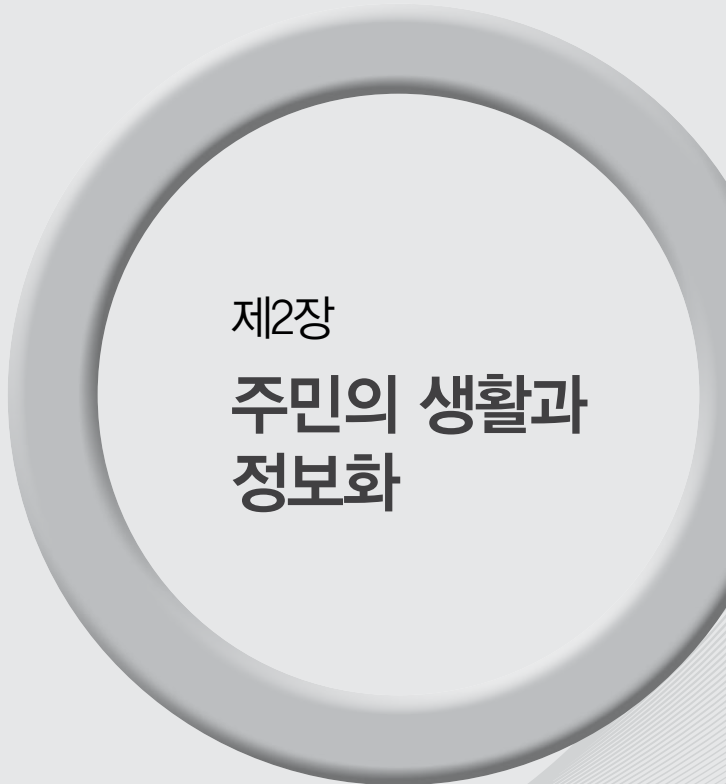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조사를 진행하여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일부 국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 내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시각과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결과를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인식하는 등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국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할 것이며, 이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은 다른 지역 주민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한점들은 오히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 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표본의 의식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은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구성된다. 매년 북한 사회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입국 연도가 아닌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동일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과 입국 사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재북 시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선의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2장 주민의 생활과 정보화

1. 서론

북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중심적 시각에서 거시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접근이 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거시 일변도의 분석과는 차별화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³ 일상생활은 억압, 복종, 회피, 불만, 소유 등 복잡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식적인 법과 제도, 규범과 절차를 통해 일상생활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일상의 동질성 유지 및 재생산에는 정치권력이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개입한다.⁴ 이처럼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한 사회에서 권력 구조가 작동하는 내밀하고 심층적인 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의 제한으로 북한사회의 생활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북한이

3_ 박영자, 2005, "북한의 일상생활 세계 - 여성 생활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24호, 197-227; 이우영 엮음, 2008,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한울아카데미; 조정아 서재진 임순희 김보근 박영자, 2008,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박순성 홍민 엮음, 2010, <북한의 일상생활 세계: 외침과 속삭임>, 한울아카데미.

4_ 박영자, 2005: 197-198

탈주민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생활상의 변화를 분석하는 질적인 방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사회변동 조사는 2012년부터 표준화된 설문 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체계적 자료를 축적해 왔다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물론 설문조사 참여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질적인 분석과는 달리 변화의 추세를 양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의, 식, 주생활의 변화, 그리고 가족생활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일상생활에서의 고민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정보화 추세도 살펴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후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식량위기 상황에서 국가중심의 배급 체계가 흔들리고, 그로 인한 공백을 시장이 대신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생계유지와 생산 활동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화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일상적인 주민의 생활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이후 의, 식, 주생활에서의 시계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와 정보화의 확산으로 새롭게 부를 축적한 계층이 등장함과 동시에 계층 간 격차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러한 계층 간 격차가 주민들의 의, 식, 주 및 정보화와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 장에서 다각도로 고찰한다.

2. 주민의 의식주 생활

1) 식생활

(1) 하루 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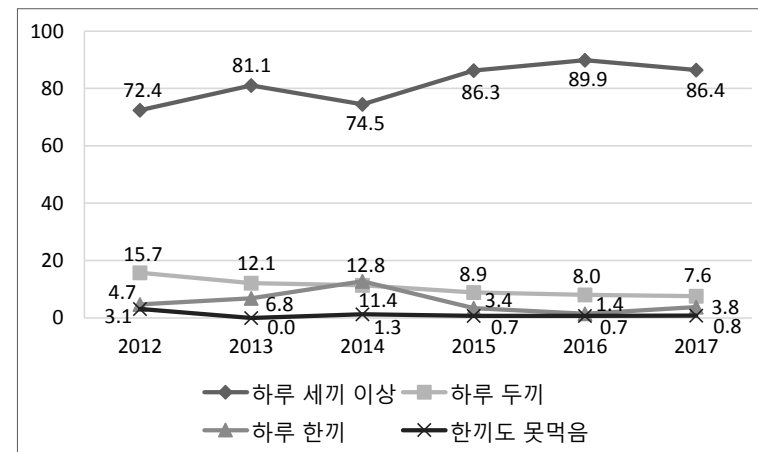
하루 식사 횟수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생활이 충족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2012년 이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데, 2015년 이후에는 하루 세 끼를 먹었다는 응답이 86%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2015년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참여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나오기 직전 하루 세 끼를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72.4%에서 2015년 86.3%로 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89.9%, 2017년에는 86.4%로 조사되었다. 반면 “하루 두 끼”를 먹었다는 응답은 2012년 15.7%, 2014년 11.4%, 2016년 8.0%, 그리고 2017년에는 7.6%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하루 한 끼”를 먹었다는 응답은 2015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2015년 3.4%, 2016년 1.4%, 2017년에는 3.8%로 조사되었다.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북한의 경제상황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의 농림어업은 농산물 및 수산물 생산이 늘어 전년 대비 2.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북한의 농림어업이 마이너스 성장(-0.8%)을 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겠다.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단위: %)



(2) 입쌀과 고기 섭취 : 식생활의 질

식생활, 특히 식사의 질적 내용은 북한 주민들의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조정아 외(2008)의 연구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탈북한 북한주민 41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면서 식생활을 기준으로 이들의 계층 지위를 구분하였다. 상층은 쌀밥을 기본 주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해 고기나 과일 등 다양한 부식물과 기호식품을 사는데 크게 제약울 느끼지 않는 사람들, 중산층은 쌀밥을 먹기는 하지만 기타 부식물을 사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하층은 쌀 이외에 다른 식량을 섞어야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⁵

5_ 조정아 외, 2008, 60.

거의 입쌀로 주식을 먹는다는 응답은 2015년 61.0%, 2016년 60.1%, 그리고 2017년에는 52.3%로 조사되었다.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는다는 응답은 2017년 12.9%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은 입쌀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거의 강냉이”(12.1%), 또는 “강냉이 위주로 입쌀을 섞어 먹는다”(6.1%)는 응답 또한 감소하기 보다는 일정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강냉이 위주의 식사를 하는 주민들이 15%~2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좋아지고 있지만 하층 주민들의 식사에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 사회의 식생활에서도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1〉 주식의 구성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거의 입쌀	89 (61.0)	83 (60.1)	69 (52.3)
입쌀 위주, 강냉이 섞음	20 (13.8)	11 (8.0)	17 (12.9)
입쌀과 강냉이 반반	13 (9.0)	14 (10.1)	22 (16.7)
강냉이 위주, 입쌀 섞음	8 (5.5)	14 (10.1)	8 (6.1)
거의 강냉이	15 (10.3)	16 (11.6)	16 (12.1)
합계	145 (100.0)	138 (100.0)	132 (100.0)

식생활 수준을 평가하는데 주식 못지않게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자주 먹는다는 응답이 이전보다 높아진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고기를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이 2012년 3.1%이던 것이 2015년 22.6%로 급증하였으며, 2016년 13.0%, 2017년에는 17.4%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먹는다는 응답도 2012년 21.3%에서 2015년 30.8%, 2016년 37.7%, 2017년 37.1%로 늘어났다. 반면 “일년에 한두 번” 먹는다는 응답은 2012년 26.8%이던 것이 2015년 10.3%, 2016년 12.3%, 2017년 9.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2-2〉 고기 섭취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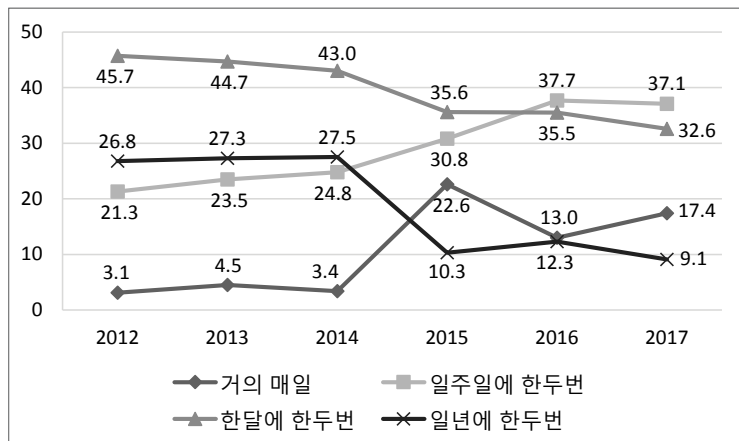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거의 매일	4 (3.1)	6 (4.5)	5 (3.4)	33 (22.6)	18 (13.0)	23 (17.4)
일주일에 한두 번	27 (21.3)	31 (23.5)	37 (24.8)	45 (30.8)	52 (37.7)	49 (37.1)
한달에 한두 번	58 (45.7)	59 (44.7)	64 (43.0)	52 (35.6)	49 (35.5)	43 (32.6)
일년에 한두 번	34 (26.8)	36 (27.3)	41 (27.5)	15 (10.3)	17 (12.3)	12 (9.1)
먹어본 적 없음	2 (1.6)	0 (0.0)	2 (1.3)	1 (0.7)	1 (0.7)	4 (3.0)
무응답	2 (1.6)	0 (0.0)	0 (0.0)	0 (0.0)	1 (0.7)	1 (0.8)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6 장용석 정은미 정근식 김경민, 2016, 〈북한사회 변동 2016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림 2-2〉 고기 섭취 횟수

(단위: %)



이처럼 전반적으로 북한 주민의 고기 섭취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농림업과 특히 수산업의 증산에 힘입은 것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농림어업이 전년 대비 2.5% 성장하였다. 또한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늘었는데, 통계청의 <2016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2014년 어획량은 전년 대비 12.5%, 2015년에는 10.6%가 증가하였다.

2) 의생활

(1) 의류의 구매 횟수

북한 사회에서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의복은 권력이나 부의 과시, 치

장, 체면 유지, 개성 표현 등 다원적인 사회적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북한산 의류가 감소하면서 수입산 옷이 늘었는데, 특히 일본산과 남한산 의류는 중국산 의류와 구별되는 고급 소비재로 인식되고 있다.⁷ 기존 연구들은 2000년 이후 식생활 못지않게 의생활에서도 빈부에 따른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옷차림이 북한 사람들의 계층 차이를 가장 눈에 띄게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⁸

이번 조사 결과는 북한 주민들의 의류 구입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절마다 한 두 벌 구입”한다는 응답이 2012년 32.3%에서 2015년 52.1%로, 2017년 조사에서는 62.1%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1년에 한두 벌” 구입했다는 응답은 27.3%였다. 즉, 10명 중 거의 9명 정도가 매년 새 옷을 사서 입는다고 볼 수 있다.

〈표 2-3〉 의류의 구매 횟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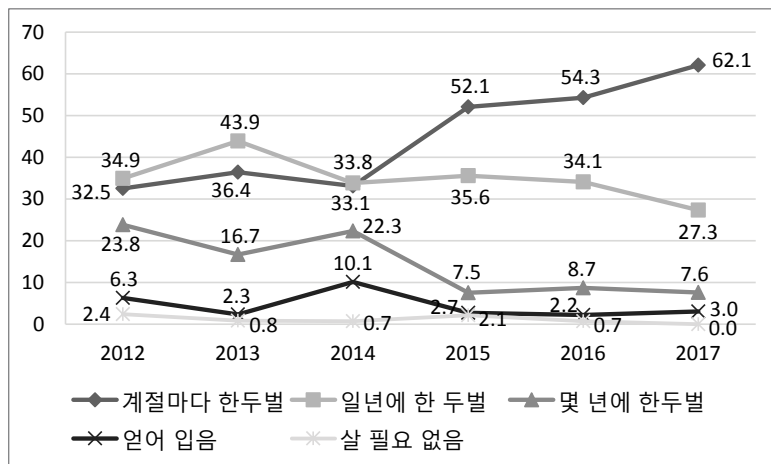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5	2017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41 (32.5)	48 (36.4)	49 (33.1)	76 (52.1)	75 (54.3)	82 (62.1)
일년에 한두 벌 구매	44 (34.9)	58 (43.9)	50 (33.8)	52 (35.6)	47 (34.1)	36 (27.3)
몇 년에 한두 벌 구매	30 (23.8)	22 (16.7)	33 (22.3)	11 (7.5)	12 (8.7)	10 (7.6)
남한테 얻어 입음	8 (6.3)	3 (2.3)	15 (10.1)	4 (2.7)	3 (2.2)	4 (3.0)
살 필요가 없었음	3 (2.4)	1 (0.8)	1 (0.7)	3 (2.1)	1 (0.7)	0 (0.0)
합계	126 (100.0)	132 (100.0)	148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7_ 장용석 외, 2016, 42.

8_ 조정아 외, 2008, 76.

〈그림 2-3〉 의류의 구매 횟수

(단위: %)



(2) 의류의 원산지 및 구입경로

북한 주민들이 입는 옷의 원산지는 중국산이 가장 많다.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겪은 이후 북한 사회에서 옷을 포함한 소비재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물품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의류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산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은 2012년 87.7%에서 2013년 93.2%로 급증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2015년 80.0%, 2016년 86.2%, 2017년 86.5%로 나타났다. 중국산 의류를 포함하여 중국산 물품들이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일본산과 남한산 옷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남한

산 옷을 주로 입었다는 응답은 2015년 9.3%에서 2015년 5.4%, 2017년 1.6%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간 교역량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남성, 특히 노동자로 일하는 남성의 비율이 예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다. 남한산과 일본산 옷은 주로 고급 의류로 인식되며,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⁹⁾

북한산 옷을 구입하는 비율이 2015년 이후 다소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2017년 조사에서 북한산 옷을 주로 입었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경제성장 추정치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4.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주로 중화학 공업의 성장세(6.7%)에 기인한다. 이에 비해 경공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2015년에 비해 다소 활성화되긴 하였지만 2016년에도 1.1% 성장하는데 그쳤다. 의류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소비재 구입이 거의 대부분 외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산' 의류 구입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향후 그 추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9_ 2017년 조사참여자의 의류 원산지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산 의류를 주로 입는다는 응답은 남성이 높았고(남성 11.9%, 여성 6.8%), 반면 일본산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았지만 여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일본산 남성 0.0%, 여성 3.4%).

〈표 2-4〉 의류의 원산지

(단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북한산	8 (7.0)	4 (3.0)	13 (9.0)	5 (3.6)	10 (7.7)	12 (9.5)
중국산	100 (87.7)	123 (93.2)	124 (85.5)	112 (80.0)	112 (86.2)	109 (86.5)
남한산	3 (2.6)	2 (1.5)	4 (2.8)	13 (9.3)	7 (5.4)	2 (1.6)
일본산	3 (2.6)	3 (2.3)	3 (2.1)	8 (5.7)	1 (0.8)	2 (1.6)
기타 외국산	0 (0.0)	0 (0.0)	1 (0.7)	2 (1.4)	0 (0.0)	1 (0.8)
합계	114 (100.0)	132 (100.0)	145 (100.0)	140 (100.0)	130 (100.0)	126 (100.0)

북한 주민들이 주로 옷을 사는 곳은 시장 또는 장마당이다. 시장 또는 장마당에서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은 2012년 91.9%, 2013년 95.5%, 2014년 95.1%로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시장을 이용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이러한 응답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2015년 90.3%, 2016년 92.0%, 2017년 88.4%로 나타났다. 국영상점이나 직매점에서 옷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북한 사회의 보편적 배급제가 유명무실화되고 국영상점의 기능이 몰락한 현실, 그리고 시장을 거점으로 한 수입산 소비재의 유통이 일상적인 현실이자 지배적인 구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인이나 친척이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였다”는 응답은 소폭 늘어났다. 이러한 응답은 2015년 6.3%, 2016년 6.6%, 그리고 2017년 조사에서는 7.8%였다. 백화점에서 옷을 샀다는 응답자도 소수

이긴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한 응답은 거의 없었지만, 2015년 3.5%, 2016년 1.5%, 2017년 3.1%로 조사되었다. 백화점은 북한의 부유한 상류층이 고급 상품이나 외산 의류를 구입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 주민들의 의생활에서 계층간 격차의 확대를 시사하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중국산 의류를 사서 입지만, 소수의 부유층들이 백화점 또는 외국에서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외산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가 2015년 이후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5〉 의류의 주요 구입 경로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장 (또는 장마당)	113 (91.9)	126 (95.5)	135 (95.1)	130 (90.3)	126 (92.0)	114 (88.4)
국영상점	1 (0.8)	1 (0.8)	0 (0.0)	0 (0.0)	0 (0.0)	1 (0.8)
직매점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백화점	1 (0.8)	0 (0.0)	0 (0.0)	5 (3.5)	2 (1.5)	4 (3.1)
외국에서 직접 구입	8 (6.5)	5 (3.8)	6 (4.2)	9 (6.3)	9 (6.6)	10 (7.8)
합계	123 (100.0)	132 (100.0)	142 (100.0)	144 (100.0)	137 (100.0)	129 (100.0)

3) 주거 생활

북한에서는 집이 대부분 국가 소유이며 매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주택을 배급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살림집을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 형식으로 생활하며, 집의 크기와 구조는 입주자의 직장이나 직위를 기준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의 배정은 정치적 조정에 따라, 즉 중앙당 간부나 주요 조직의 고위직들이 아파트 또는 고급주택을 배정받는다.¹⁰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친 후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의 매매 및 신축이 늘어남과 동시에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점차 돈 있는 사람들, 신흥 부자들이 크고 좋은 집을 차지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¹¹

(1) 살림집 유형

이번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살림집의 형태는 연립주택(하모니카집) (44.7%)이 가장 많고, 단독주택(26.5%), 아파트(22.0%)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2년 이후의 추세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연립주택이며,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그 다음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하는 집의 형태는 거주지역 따라, 즉 도시나 농촌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또한 생활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사를 종합하여 생활수준(탈북직전 시점 기준)에 따른 주거 형태의 분포를 교차 분석해 보았다.

10_ 장용석 외, 2016, 49.

11_ 조정아 외, 2008, 99~100.

교차 분석 결과(〈표 2-7〉) 탈북 직전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단독주택(45.8%)에 거주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파트(37.3%), 연립주택(13.6%), 기타(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층”인 사람은 연립주택 거주비율이 절반(46.6%)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25.6%)와 단독주택(22.5%) 거주자는 상층보다 낮은 편이다. 생활수준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0.4%가 연립주택에 거주 하였던 반면, 아파트(17.0%)와 단독주택(16.5%) 거주자의 비율은 훨씬 낮았다.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에 따라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도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X^2=50.278^{***}$). 이러한 결과는 북한 주민 내부의 계층 분화가 일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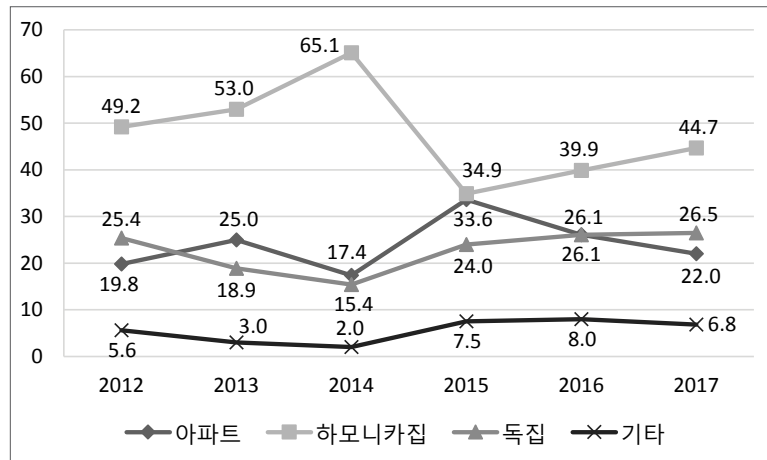
〈표 2-6〉 살림집 유형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5	2017
아파트	25 (19.8)	33 (25.0)	26 (17.4)	49 (33.6)	36 (26.1)	29 (22.0)
연립주택	62 (49.2)	70 (53.0)	97 (65.1)	51 (34.9)	55 (39.9)	59 (44.7)
단독주택	32 (25.4)	25 (18.9)	23 (15.4)	35 (24.0)	36 (26.1)	35 (26.5)
기타	7 (5.6)	4 (3.0)	3 (2.0)	11 (7.5)	11 (8.0)	9 (6.8)
합계	126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그림 2-4〉 살림집 유형

(단위: %)



〈표 2-7〉 교차 분석 : 탈북직전 생활수준별 살림집 형태 (2012~2017)

(단위: 명(%))

교차 분석 ($\chi^2=50.278^{***}$)		탈북직전 생활수준			
		상층	중층	하층	계
살림집 형태	아파트	22 (37.3)	135 (25.6)	39 (17.0)	196 (24.0)
	연립주택	8 (13.6)	246 (46.6)	139 (60.4)	393 (48.1)
	단독주택	27 (45.8)	119 (22.5)	38 (16.5)	184 (22.5)
	기타	2 (3.4)	28 (5.3)	14 (6.1)	44 (5.4)
	합계	59 (100.0)	528 (100.0)	230 (100.0)	817 (100.0)

(※무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p < .001)

(2) 살림집의 장만 경로

북한 사회에서 주택의 시장 거래와 상품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 살림집을 취득한 경로를 보면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처럼 시장에서 집을 구매했다는 응답자는 2012년 46.0%, 2013년 66.7%로 높아졌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58.8%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은 2012년 28.6%였고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5년 이후에는 20%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나타나며 2017년 조사에서는 18.3%로 나타났다. 주택을 국가가 배정해 주는 사회주의 배급제의 체계가 이미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묵인 혹은 방조 속에서, 북한에서도 개인 간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다”는 응답은 2015년 17.2%, 2015년 13.8%, 2015년 14.5%로 조사되었다. “내가 직접 지었다”는 응답은 2015년 4.8%에서 2015년 15.2%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6.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특성상 조사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년도 조사 참여자의 생활수준이나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응답률이 유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거래가 시장화·상품화되는 추세가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탈북 직전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상·중·하 모든 계층에서 “돈을 주고 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상층 58.6%, 중층 58.8%, 하층 45.4%).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 뿐 아니라 “하층” 주민들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택을 시장에서 구입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내가 직접

지었다”는 응답은 상층에서 20.7%로 가장 높은 반면 중층(7.1%), 하층(8.3%)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 탈북자와의 면접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신축과 개발이 부의 축적을 위한 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¹² 상층 계층이 주택 신축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반면 집을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은 하층에서 25.8%로 가장 높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국가에서 지정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더 낮아졌다(중층 19.7%, 상층 10.3%).

종합하면, 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택의 공급이 사회주의적인 국가배급 체계에서 시장 중심의 체계로 상당히 이동하고 있으며 살림이 넉넉한 상층 뿐 아니라 하층 서민들도 이미 살림집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추세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층은 주택 신축에 보다 적극적인 반면, 하층 주민들은 국가지정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살림집 장만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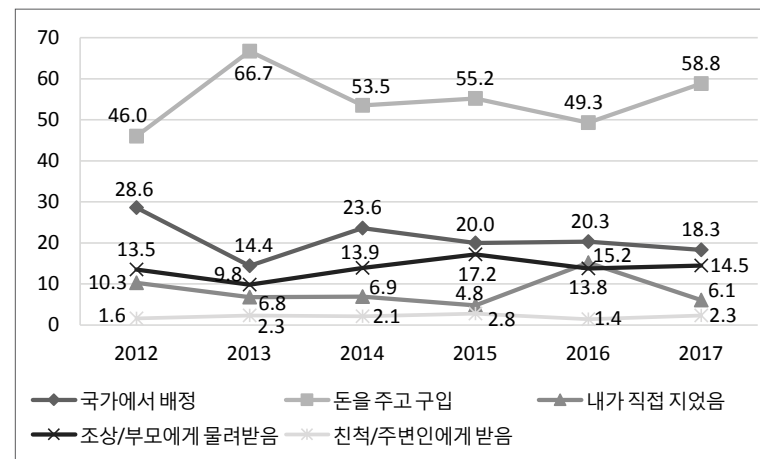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5	2017
국가에서 배정받음	36 (28.6)	19 (14.4)	34 (23.6)	29 (20.0)	28 (20.3)	24 (18.3)
내가 돈 주고 샀음	58 (46.0)	88 (66.7)	77 (53.5)	80 (55.2)	68 (49.3)	77 (58.8)
내가 직접 지었음	13 (10.3)	9 (6.8)	10 (6.9)	7 (4.8)	21 (15.2)	8 (6.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5	2017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17 (13.5)	13 (9.8)	20 (13.9)	25 (17.2)	19 (13.8)	19 (14.5)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2 (1.6)	3 (2.3)	3 (2.1)	4 (2.8)	2 (1.4)	3 (2.3)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그림 2-5〉 살림집 장만 경로

(단위: %)



12_ 조정아 외, 2008

〈표 2-9〉 교차 분석 : 탈북직전 생활수준별 살림집 장만 방법 (2012~2017)
(단위: 명(%))

교차 분석 ($\chi^2=27.799^{***}$)		탈북직전 생활수준			
		상층	중층	하층	계
살림집 장만방법	국가에서 배정받음	6 (10.3)	103 (19.7)	59 (25.8)	168 (20.8)
	내가 돈 주고 샀음	34 (58.6)	307 (58.8)	104 (45.4)	445 (55.0)
	내가 직접 지었음	12 (20.7)	37 (7.1)	19 (8.3)	68 (8.4)
	조상/부모로부터 물려받음	6 (10.3)	67 (12.8)	39 (17.0)	112 (13.8)
	친척/주변사람한테 받음	0 (0.0)	8 (1.5)	8 (3.5)	16 (2.0)
합계		58 (100.0)	522 (100.0)	229 (100.0)	809 (100.0)

(※무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 p < .001)

3. 북한주민의 가계생활과 가족생활

1) 가계소득의 지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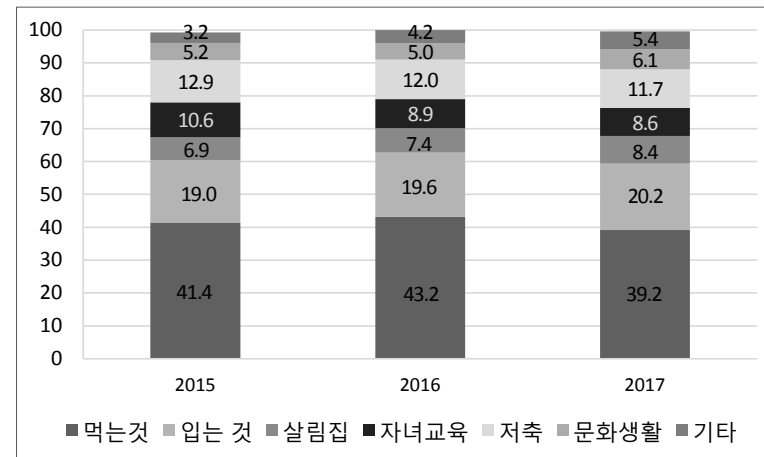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이 가계 소득을 어떤 비목에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즉 소비생활의 패턴은 북한의 사회구조와 계층별 생활상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5년 조사부터는 먹는 것, 입는 것, 살림집, 자녀 교육, 뇌물, 저축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월 평균 항목별로 어느 정도 생활

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 까지의 지출 항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월평균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이다. 2017년 조사에서 식비 비율은 39.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의류비(20.2%), 저축(11.7%), 자녀교육(8.6%), 살림집(8.4%), 문화생활(6.1%)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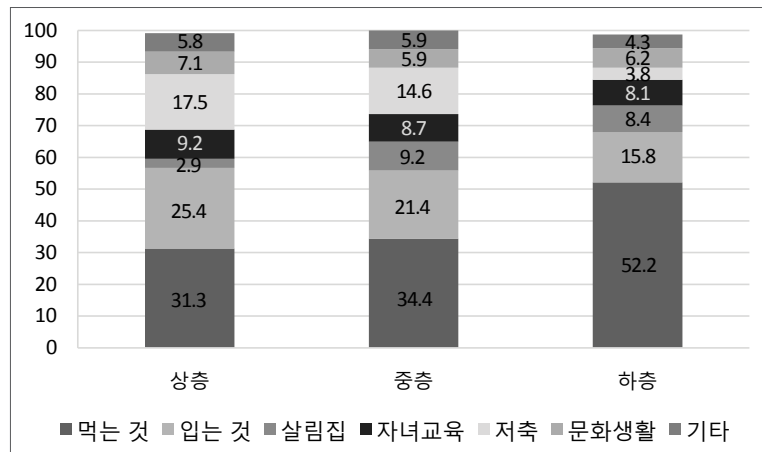
〈그림 2-6〉 가계 소득의 주요 지출 내역

(단위: %)



〈그림 2-7〉 가계소득의 주요 지출내역 - 계층별 (2017)

(단위: %)



그런데 월평균 지출 항목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2017년 조사결과를 탈북 직전 응답자의 주관적 계층 지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스스로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식비 31.3%, 의류비 25.4%, 저축 17.5%로 나타났다. 평균에 비해 식비의 비중이 낮은 반면 의류비와 저축은 높다. 이와 달리 스스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식비가 52.2%로 크게 높은 반면 의류비(15.8%)와 저축(3.8%) 비중은 훨씬 낮았다. 계층에 따른 지출 패턴의 차이가 이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북한 사회의 계층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의 일단을 보여준다.

2) 남한물건 사용 경험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일상적인 공산품은 주로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과 남한산 물품은 고급으로 인식되고 있다.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에 따르면, 남한산 물품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낫익은 상품이 되었다고 한다.¹³ 그러나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남북교역 제외)는 2015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며(-17.9%) 2016년에 소폭 회복되었다(4.6% 성장). 또한 남북한 교역도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¹⁴ 이러한 대외교역 상의 변화가 남한 물건 사용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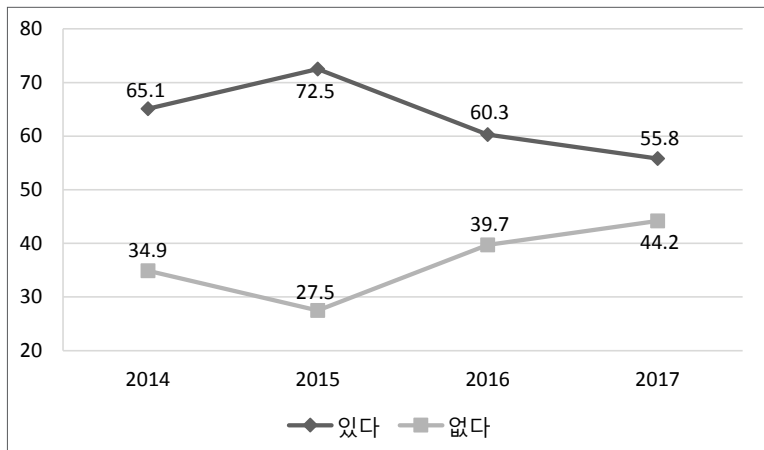
2017년 조사에서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물건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4.5%였으며, 지난 2015년(70.5%), 2016년(59.4%)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용해본 남한산 물품의 종류를 살펴보면(2014~17년 조사결과 합산), 전체적으로 의류가 가장 많았고 식품류, 잡화(시계, 신발 등), 가전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의류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남한 상품이며, 다만 최근으로 오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남한산 제품 사용경험이 줄어들었지만 가전제품은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13_ 조정아 외, 2009, 86~87.

14_ 한국은행, 2017,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2017. 7. 21. 발표) (<http://www.bok.or.kr>)

〈그림 2-8〉 남한산 물건 사용 경험

(단위: %)



〈표 2-10〉 사용해본 남한 물건의 종류 - 중복 응답 (2014~2017)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의류	60	75	50	48	233
식품류	46	45	38	25	154
잡화	40	35	45	26	146
가전	29	32	22	29	112
기타	9	5	1	4	19
합계	184	192	156	132	664

3) 가정 내 의사결정

일반적으로 북한 가정에서는 남편이 세대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서는 여성들이 늘어났고,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여성들의 발언권이 커짐에 따라 종래 가부장 중심의 가족생활에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여성들이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한다.¹⁵

2015년부터 가정 내 의사결정을 남편과 부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북한의 변화상을 읽어볼 수 있다.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015년 29.7%, 2016년 27.2%에서 2017년에는 31.0%로 다소 증가하였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는 2015년 19.6%, 2016년 24.3%, 그리고 2017년에는 29.5%로 나타났다. 남편이 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17년 조사 참여자 중에 남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응답은 2015년 28.3%, 2016년 31.6%, 2017년에는 24.8%로 나타났다. 부부가 평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30% 수준이나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015년 22.5%, 2016년 16.9%, 2017년 14.7%에 그쳤다.

15_ 조정아 외, 2008, 247-248.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과 가부장적 문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응답률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지난 3년간(2015~17)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성별에 따라 가정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응답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여성들은 “남편과 부인이 함께 결정”(30.3%)하거나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28.1%)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대로 남성들은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37.8%), “부인과 상의하여 남편이 주로 결정”(32.0%)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상이한 태도가 엇갈리는 ‘동상이몽’ 현상은 북한의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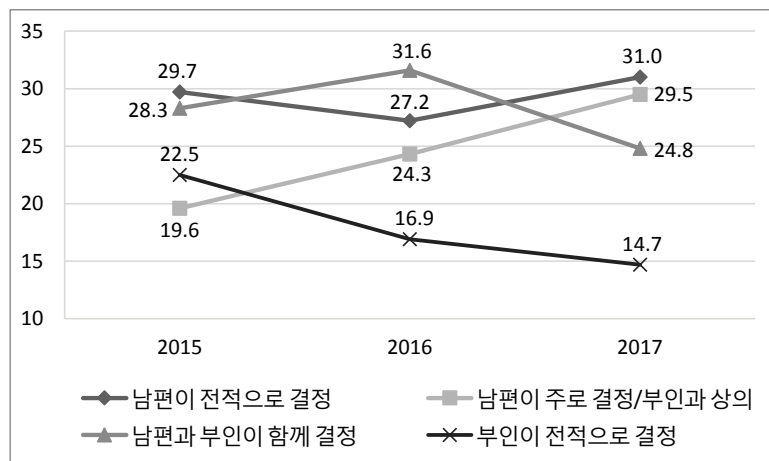
〈표 2-11〉 가정 내 의사결정 : 성별 응답 비교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성별		합계
	남자	여자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	65 (37.8)	53 (22.9)	118 (29.3)
남편의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상의	55 (32.0)	43 (18.6)	98 (24.3)
남편과 부인이 함께 결정	44 (25.6)	70 (30.3)	114 (28.3)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	8 (4.7)	65 (28.1)	73 (18.1)
합계	172 (100.0)	231 (100.0)	403 (100.0)

〈그림 2-9〉 가정 내 의사결정

(단위: %)



4) 자녀 사교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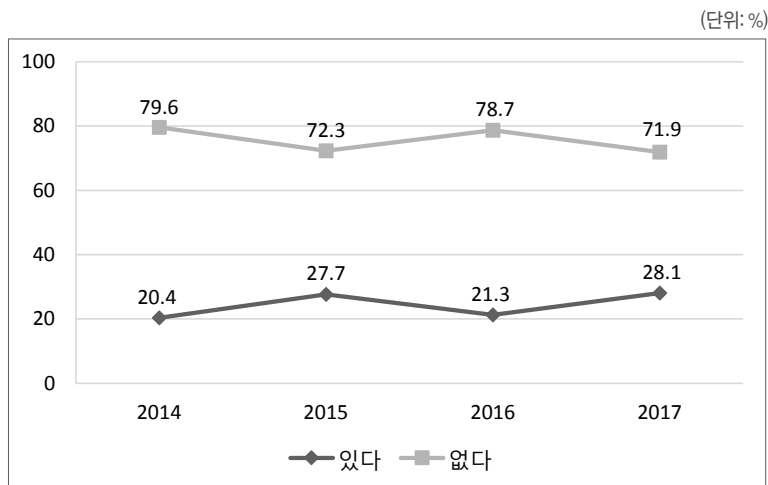
앞의 월별 가계 지출구조 분석에서 자녀교육 비용은 8%가 넘는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무상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교육 비용은 가계지출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2014년부터 자녀들이 개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북한에서 사교육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읽을 수 있다. 북한에 있을 때 자녀에게 개인 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14년 20.4%, 2015년 27.7%, 2016년 21.3%였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28.1%로 높아졌다.

악기, 성악, 연주 등 음악은 북한의 사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7년 조사에서는 전체 사교육 경험자 중 45.7%가 자녀에게 음

16. 장용석 외, 2016, 66.

악을 가르쳤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악 다음으로 선호하는 사교육 과목은 외국어(18.3%), 기타 교과목(16.8%)의 순이다. 컴퓨터, 체육, 무용 사교육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 (6.9%)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0〉 자녀 사교육 경험



〈표 2-12〉 사교육 내용 (1순위 기준)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5	2017	합계
음악	14 (46.7)	18 (47.4)	10 (35.7)	16 (45.7)	58 (44.3)
외국어	4 (13.3)	11 (28.9)	6 (21.4)	3 (8.6)	24 (18.3)
컴퓨터	1 (3.3)	2 (5.3)	4 (14.3)	2 (5.7)	9 (6.9)

구분	2014	2015	2015	2017	합계
체육	3 (10.0)	2 (5.3)	0 (0.0)	4 (11.4)	9 (6.9)
무용	2 (6.7)	2 (5.3)	4 (14.3)	1 (2.9)	9 (6.9)
기타 교과목	6 (20.0)	3 (7.9)	4 (14.3)	9 (25.7)	22 (16.8)
합계	30 (100.0)	38 (100.0)	28 (100.0)	35 (100.0)	131 (100.0)

계층에 따른 사교육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 아래의 교차표이다. 사교육 경험은 상층이 33.3%로 가장 높았지만, 중층도 25.8%로 4명 중 1명 이상이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층에서 자녀 사교육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사교육이 상류층만의 전유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2-13〉 자녀 사교육 경험과 탈북직전 생활수준 (2014~2017)

(단위: 명(%))

구분		탈북직전 생활수준			계
		상층	중층	하층	
사교육 경험	있다	14 (33.3)	93 (25.8)	26 (18.4)	133 (24.4)
	없다	28 (66.7)	268 (74.2)	115 (81.6)	411 (75.6)
합계		42 (100.0)	361 (100.0)	141 (100.0)	544 (100.0)

(※무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5) 일상생활의 고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의, 식, 주생활과 가계 지출, 부부관계 및 자녀교육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이 각론적인 것이라면, 일상의 모습을 총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생활에서의 고민거리’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 주민들의 고민거리 순위는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돈벌이 걱정”이며 그 다음은 “보안원과 보위부 등 각종 단속”이다. 돈벌이가 일상적 고민이라는 응답은 2012년 56.7%, 2014년 51.0%, 2016년 50.5%, 2017년 52.3%로 나타나, 조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았다. 보안원과 보위부의 각종 단속에 대한 고민은 2012년 22.0%, 2014년 28.2%, 2016년 26.8%, 그리고 2017년에는 27.3%로 나타났다. 단속과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사회통제에서 느끼는 고민거리로 조직생활의 부담을 꼽은 응답은 5.3%,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은 2.3%로 각각 조사되었다 (2017년).

〈표 2-14〉 북한 거주 시 일상 고민

(단위: 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돈벌어야 하는 걱정	72 (56.7)	66 (50.0)	76 (51.0)	69 (47.3)	69 (50.0)	69 (52.3)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1 (0.8)	4 (3.0)	6 (4.0)	3 (2.1)	7 (5.1)	3 (2.3)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	28 (22.0)	40 (30.3)	42 (28.2)	47 (32.2)	37 (26.8)	36 (27.3)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직생활	8 (6.3)	9 (6.8)	6 (4.0)	12 (8.2)	12 (8.7)	7 (5.3)
출세	3 (2.4)	6 (4.5)	4 (2.7)	6 (4.1)	5 (3.6)	0 (0.0)
자녀교육	6 (4.7)	4 (3.0)	7 (4.7)	7 (4.8)	7 (5.1)	10 (7.6)
기타	3 (2.4)	3 (2.3)	1 (0.7)	1 (0.7)	0 (0.0)	4 (3.0)
무응답	6 (4.7)	0 (0.0)	7 (4.7)	1 (0.7)	0 (0.0)	3 (2.3)
합계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그 밖에도 자녀교육이 고민거리라는 응답이 2012년 4.7%에서 2016년 5.1%, 2017년에는 7.6%로 계속 상승하는 것도 주목된다.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자녀교육 지출이 가계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사교육 경험도 점차 증가하는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출세’에 대한 고민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성공에 대한 고민보다는 생존을 유지하고 단속을 피하려는 방어적인 관심이 훨씬 큰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분위기가 엿보인다.

사실 생존을 위한 돈벌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되는 일상적 고민거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는 보안원과 보위부 등 각종 기관의 단속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옥죄는 고민거리로 꼽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주민

들은 공장이나 직장에서의 공식적인 벌리로 생활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비법 노동’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노동 이외에 생존을 위한 외부 일이나 장사 등을 해야 하고, 상급자나 감시 감독기관의 묵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시 감독을 피하는 일은 일상적인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었다. 또한 장사나 사업에 대한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가 변경되거나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정책 변화는 생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¹⁷ 북한의 대다수 노동계층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생존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당국의 단속이나 정책 변화는 생존을 위협하는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주민생활과 정보화

1)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의 추이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컴퓨터와 이동통신 확대 등 정보화는 중요한 사회변동의 추세로 주목을 받아왔다.¹⁸ 통계청의 <2016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0년 4만 3천 2백 명에서 2011년 1백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약 3백 24만 명

에 이른다.¹⁹ 불과 4년 동안 세배 이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북한 사회의 정보화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우선 정보화 자체는 새로운 정보의 증가, 남한과 중국 등 주변국 문화가 확산되는 통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 사회로 서독의 매스 미디어와 방송이 확산됨으로써 체제 변동을 앞당겼던 것과 유사하게, 정보화는 아래로부터 일상적 인식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정보기기의 활용은 장마당과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북한의 신흥 집단의 등장, 더 나아가 북한 내부의 계층 격차 확대를 보여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도 자생적 시장이 확대되면서, 특히 중국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 남한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매체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영상매체들이 인적 네트워크나 장마당 등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²⁰ 정보화 기기나 영상매체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를 접하는 통로로 작용한다.

2015년부터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유 또는 이용해본 기기는 녹화기다 (2015년 66.4%, 2016년 72.5%, 2017년 60.6%). 2017년 조사에서는 노트북 보유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15년 41.8%, 2016년 47.8%에서 2017년 55.3%로 늘어났다. 노트북은 CD나 USB 저장장치 등을 통해 동영상을 재생하며 값싸게 남한

17_ 조정아 외 2008: 112

18_ 장용석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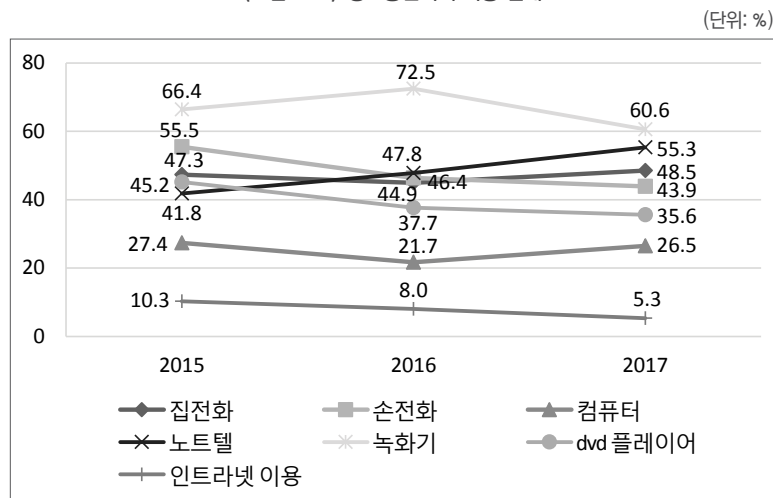
19_ 통계청, 2016, <2016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153.

20_ 강동완·박정란, 2010,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권 2호, 107~140.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로 알려져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녹화기와 노트텔은 모두 영상 기기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동전화(손전화) 이용률은 2015년 55.5%에서 2016년 46.4%, 2017년에는 43.9%로 다소 감소하였다. 집전화는 2015년 47.3%, 2016년 44.9%, 2017년 48.5%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다. 영상 기기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통신 기기는 현상 유지 혹은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 보유는 4명 중 1명 정도(2017년 26.5%)이며, 인트라넷 이용률은 5.3%(2017년)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속의 통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1〉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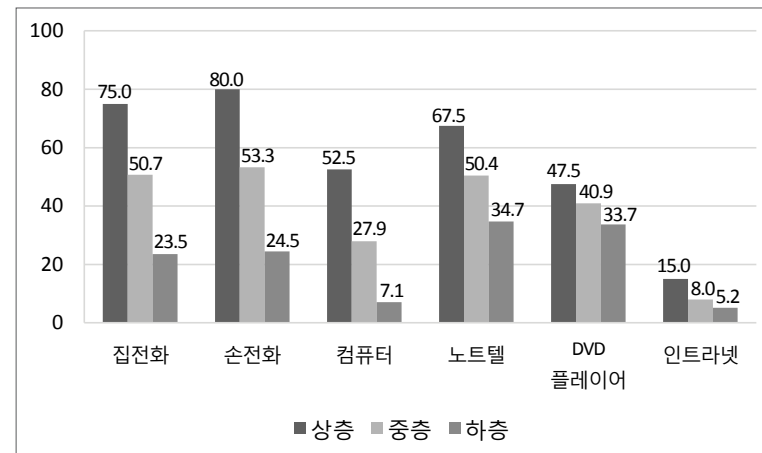


2) 정보화 - 연령·계층별 차이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사회의 정보화가 계층, 연령,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달리 진행되고 있는지, 즉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정보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화 기기 이용률을 교육수준, 연령, 계층(탈북 직전의 생활), 그리고 남한 물품 사용경험과 교차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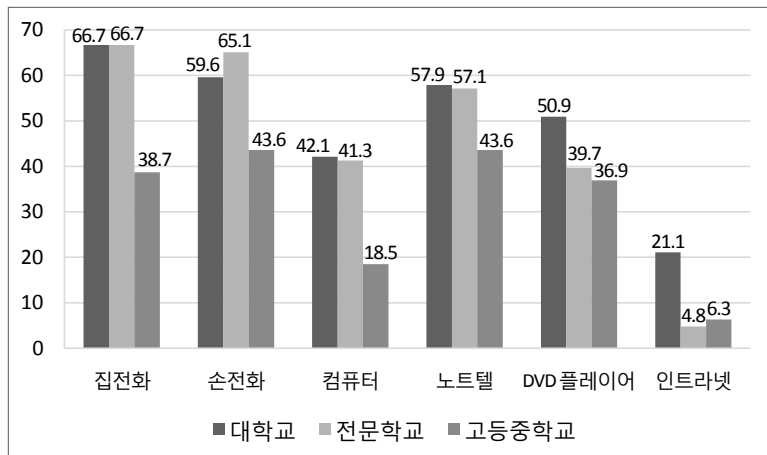
〈그림 2-12〉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계층별

(단위: %)



〈그림 2-13〉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교육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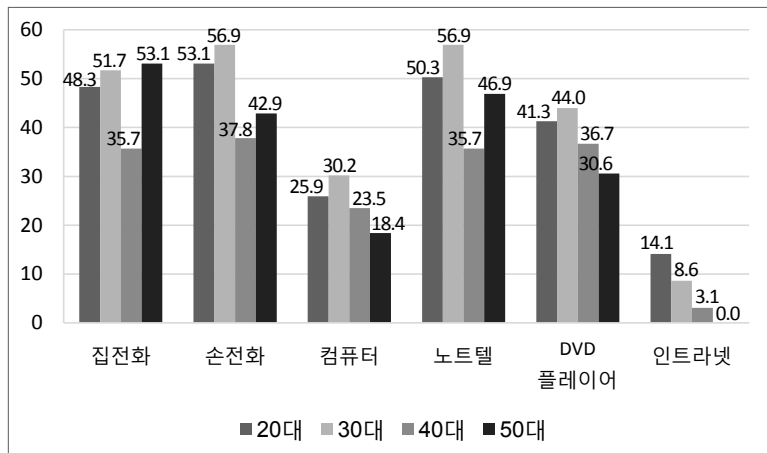
(단위: %)



※ 인민학교, 무학자는 사례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2-14〉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연령대별

(단위: %)



※ 60대 연령층은 사례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함.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 경험은 계층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다. 스스로 '상층'이라 응답한 사람 중 80%가 이동전화, 52.5%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노트북, 집전화, 인터넷 이용 등 모든 기기에서 상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반면 하층에서는 이동전화 24.5%, 컴퓨터 7.1%, 노트북 34.7%로 조사에 포함된 모든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이 확연하게 낮다. 북한 사회에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정보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수준 별로 보면, 대학교와 전문학교 학력자 간에는 집전화와 컴퓨터, 노트북 보유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손전화 이용률은 전문학교 학력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손전화 이용률 대학교 59.6%, 전문학교 65.1%, 고등중학교 43.6%).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기기 이용은 교육수준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인터넷 이용경험은 대학교 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대학교 21.1%, 전문학교 4.8%, 고등중학교 6.3%).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지만 내부 정보망인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2000년경부터 인터넷 '광명'을 통해 정보 검색 및 이메일 사용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용석 외 2016: 77).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접속 경험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주로 고학력자들이 사용함으로 학력에 따른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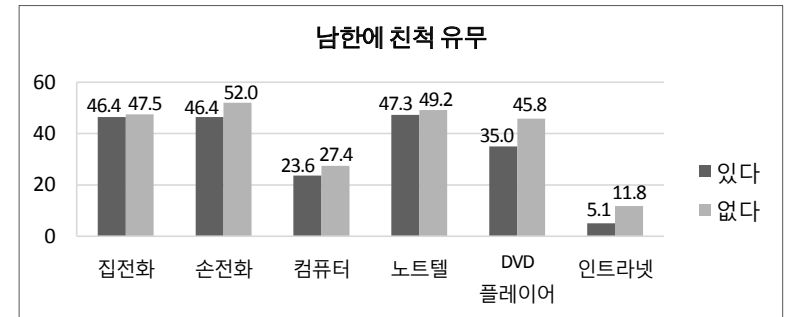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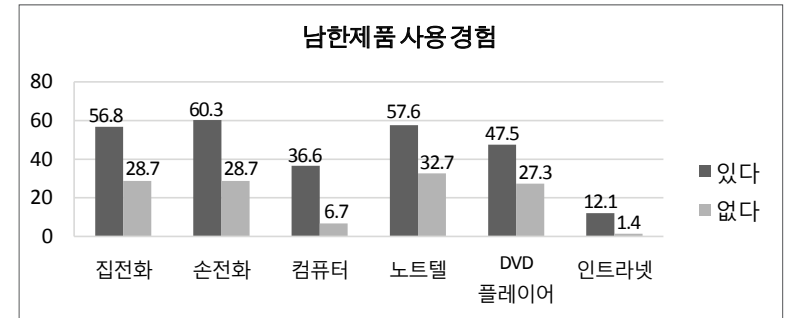
정보통신의 기술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정보격차가 나타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경우 30대 연령층이 손전화(56.9%), 컴퓨터(30.2%), 노트북(56.9%), dvd 플레이어(44.0%) 등 정보통신 이용율이 가장 높다. 단, 인터넷 이용

경험은 20대(14.1%)가 30대(8.6%)보다 더 많았다. 인트라넷을 제외하면 북한 주민들의 정보화 이용경험은 연령 보다는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 간 이동, 시장 활동 경험 많은 중장년층에서 높은 편이다. 50대의 정보기기 이용률이 40대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이동전화(40대 37.8%, 50대 42.9%)와 노트북(40대 35.7%, 50대 46.9%)은 40대보다 50대 연령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 사회와의 접촉, 즉 남한 제품 사용경험이나 남한에 친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화 경험에도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남한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정보화 이용 경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한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이동전화 이용률은 60.3%로 남한제품을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28.7%)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노트북, 집전화, 컴퓨터, 인트라넷 이용 등 모든 분야에서 남한물건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남한에 친척이 있는가 여부는 정보통신 이용과는 관계가 거의 없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보화 수준과 남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중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추세로 볼 수 있다.

〈그림 2-15〉 정보통신 기기 이용률 - 남한과의 접촉 경험 여부

(단위: %)



5. 결론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이 안정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식생활과 의생활은 심각한 결핍이 없이 안정되고 있으며, 특히 고기 섭취나 의류 구입 횟수가 이전보다 증가되어 일부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계지출의 구성비를 보더라도 식비와 의류비 등 지출 항목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가 나타난다. 이는 김정은 정권 이후 2016년 경제성장률 증가와 농림수산업의 안정세 등 거시 지표의 개선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대외교역이 제한된 상태에서 계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주민들의 생활상에서도 남한이나 해외 소비재의 구입이 줄어들고 정보화 기기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지표들도 나타났다.

둘째, 북한 주민 내부의 계층간 격차는 양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식생활의 양과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강냉이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생활에서는 연립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단독주택, 아파트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상층에서는 집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률에서도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계지출의 구조가 계층별로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데, 하층은 식비 비율이 높은 반면 상층은 의류 구입비와 저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장을 통한 거래의 확산과 정보화 확대가 북한주민들 내부의 계층 격차

를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장마당을 통한 생존활동의 증가는 북한의 가족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요구된다. 구래의 국가중심의 배급이나 주택 제공, 무상교육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가족 단위의 생존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가족 간의 의사결정구조, 세대 간 가족 재생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가정 내 의사결정은 대체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된다. 또한 자녀 교육비용이 가계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의 사교육 경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적 사회 체계의 공백으로 생존의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된다면, 이는 곧 가족의 기능적 과부하, 그리고 가족 내부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물질적 지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북한 사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분석도 물질적인 기초 지표의 분석에서 보다 다층적인 삶의 질에 대한 분석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3장

경제의 시장화와
사회적 분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3장 경제의 시장화와 사회적 분화

1. 서론

2017년 북한 관련 핵심요소는 핵위기 고조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북핵·미사일 제재결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악화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5월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를 시작으로 5월 17일 ‘북극성 2형(KN-15)’ 발사, 5월 27일 신형 지대공 요격유도 무기체계(KN-06 추정) 시험발사, 5월 29일 스커드-ER급 지대함 탄도미사일 발사 등 5월에만 네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6월 8일에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였고, 7월 4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 같은 달 28일에도 ‘화성-14형’ 발사하여 1천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8월 26일에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29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2,700KM로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하여 기술의 진전을 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규모 5.7의 6차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수소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같은 달 15일에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는데 비행거리가 약 3,700여

KM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월 29일에는 ICBM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다.²¹

이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6월 2일,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8월 5일에는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였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9월 11일에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대북 석유제품은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 유류공급의 30% 가량을 차단하였고,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섬유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연이어 9월 15일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였으며, 12월 22일에는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였다. 이는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 원유 공급량을 현행 수준으로 알려진 ‘연간 400만 배럴’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귀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²²

이와 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21. 김도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도발 일지,” 연합뉴스. 2017.9.3.; 이민찬, “북,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 아시아경제. 2017.11.29

22. 이준서, “유엔안보리 ‘북핵·미사일 제재결의 일지,’” 연합뉴스. 2017.12.23.; 반종빈,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주요 일지,” 연합뉴스. 2017.9.12

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국내적·국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소득분화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변화 추세를 살펴보는 것 역시 본 장이 주요하게 다룰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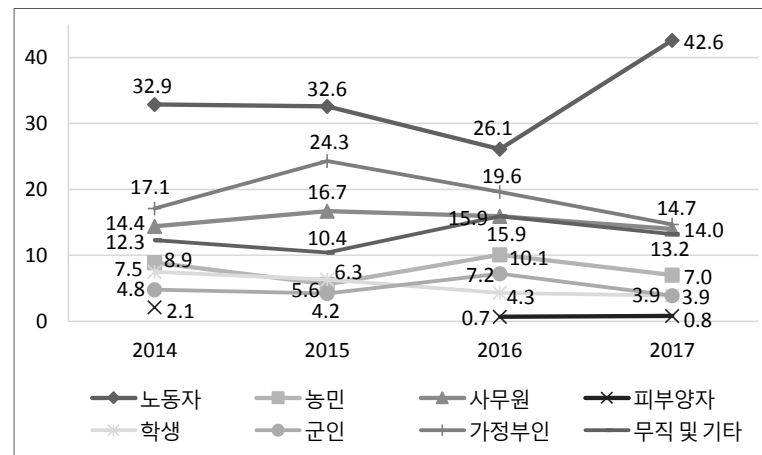
2. 경제의 시장화

(1) 공식적인 직업

공식적인 직업은 노동자 42.6%, 가정부인 14.7%, 사무원 14%, 무직 및 기타 13.2%, 농민 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6년 26.1%였던 노동자 비율이 2017년 조사에서 42.6%로 급증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직업을 묻은 것이기 때문에 장사, 밀수 등의 항목이 빠져있어 기타 영역으로 빠져있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공식적인 직업

(단위: %)



이를 증명하듯, 소득을 얻는 주요 수입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타가 3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매장사가 14.3%, 되거리 장사가 11.8%, 외화벌이 10.9%, 샅벌이 7.6%, 돈장사 5.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2년부터의 조사 자료를 비교해보면, 소매장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영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밀수가 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3-1〉 소득을 얻는 주요 수입원

(단위: %)

	소매 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 가공	식당, 상점 임대	되거리 장사	외화 벌이	돈장사	삿별이	해외 파견	기타
2012	36.8	4.7	1.9	1.9	10.4	10.4	6.6	3.8	0.9	22.6
2013	38.8	5.2	4.3	0.0	6	12.1	5.2	10.3	0.9	16.4
2014	31.7	5.6	3.2	3.2	15.9	6.3	3.2	7.9	1.6	21.4
2015	27.3	0.0	2.3	4.7	13.3	15.6	7.8	2.3	0.0	26.6
2016	21.5	3.3	0.0	2.5	22.3	8.3	3.3	6.6	0.8	31.4
2017	14.3	5.9	2.5	0.0	11.8	10.9	5.9	7.6	3.4	37.8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한 기간을 보면 2017년의 경우 2016년에 비해 6개월 미만은 증가하였고, 5년 이상의 경우도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면서 비교적 사적 경제활동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6개월 미만 종사자가 2017년에 와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이는 5년 이상 근무자의 증가와 배치되는 결과이므로, 향후 몇 년간 그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표 3-2〉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 기간

(단위: %)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2012	15.5	5.8	28.2	15.5	35
2013	7.6	7.6	16.9	15.3	52.5
2014	8.1	4.9	14.6	18.7	53.7
2015	9.3	7	20.9	19.4	43.4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2016	4.1	12.4	19.8	15.7	47.9
2017	8.4	5.9	19.3	13.4	52.9

북한에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상품이나 원부자재의 출처를 살펴보면 2017년 조사 결과가 2016년 결과에 비해 북한산이라는 응답이 0.6% 증가, 중국산이라는 응답이 1.9% 증가하였다. 남한이나 러시아, 일본, 기타 지역 등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주요 수입원에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보면 67%가 중국산, 북한산이 29.8%로 여전히 중국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 성과에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표 3-3〉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사용한 상품 및 원부자재 출처

(단위: %)

구분	북한	중국	남한	러시아	일본	기타
2012	22.5	73	4.5	0.0	0.0	0.0
2013	34.7	62.7	1.7	0.0	0.8	0.0
2014	29.8	65.8	2.6	0.0	0.9	0.9
2015	34.2	59.2	5	0.0	0.8	0.8
2016	29.2	64.6	3.5	1.8	0.9	0.0
2017	29.8	66.7	2.6	0.0	0.9	0.0

한편, 북한에 거주할 당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고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2016년에 비해 8.4% 상승하였다. 2012년 조사 결과부터 2017년

까지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험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의 결과는 절반 가까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내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가족 중심의 사업이 아닌, 본격적인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 3-4〉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가족 이외 타인 고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2012	25	75
2013	29.7	70.3
2014	23.6	76.4
2015	34.9	65.1
2016	36.1	63.9
2017	44.5	55.5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가족 이외의 타인을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고용했는지에 대해 5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2016년 조사에서 상당히 감소하였고, 반면 5명 이상에서 10명 미만이라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5명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용 규모가 미세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관찰된다.

〈표 3-5〉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가족 이외 타인 고용 규모(연간 평균) (단위: %)

구분	5명 미만	5명-10명 미만	10명-15명 미만	15명-20명 미만	20명 이상
2012	66.7	9.5	14.3	0.0	9.5
2013	57.1	22.9	8.6	0.0	11.4
2014	63	7.4	14.8	3.7	11.1
2015	71.2	11.5	3.7	1.9	11.5
2016	59.5	19	7.1	7.1	7.1

(2) 경제활동시 어려운 점

북한에서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겪은 가장 큰 애로 사항에 대한 질문에 50%의 응답자가 법기관의 단속이나 뇌물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사업자금이 23.7%, 전기 8.5%, 원료 확보가 6.8%로 나타났다. 법기관의 단속과 뇌물은 조사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조사에서는 절반이 1순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문제점이다. 사적 경제활동이 제도화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관료들의 통제가 단속 및 뇌물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사 초기인 2012년과 2013년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법기관의 단속과 뇌물 역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3-6〉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 (1순위)

(단위: %)

구분	사업 수완	사업 자금	원료 확보	판매 경쟁	교통 인프라	전기	법기관 단속, 뇌물	기타
2012	6.1	47.5	16.2	6.1	7.1	7.1	10.1	0.0
2013	8.5	52.5	11	3.4	15.3	8.5	0.8	0.0
2014	4.9	26	5.7	4.9	8.1	13	30.9	6.5
2015	2.4	15	11	3.9	4.7	7.9	52.8	2.4
2016	4.2	17.8	10.2	4.2	5.1	5.1	47.5	5.9
2017	2.5	23.7	6.8	0.8	4.2	8.5	50	3.4

〈표 3-7〉 전체 수입 중 뇌물의 비중

(단위: %)

구분	10%이하	2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50%이상	전혀 없음
2012	24.6	16.4	18.9	9.8	4.9	11.5	13.9
2013	26.9	18.5	16.9	10	10.8	6.9	10
2014	17.4	20.1	22.1	9.4	4.7	10.1	16.1
2015	25	19.4	11.8	9	6.3	9.7	18.8
2016	17.5	16.8	23.4	9.5	8.8	9.5	14.6
2017	16.9	17.7	20.8	9.2	5.4	15.4	14.6

3. 경제적 계층 분화

북한 주민들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계층 분화의 첫 번째 이유로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을 꼽고 있다. 직위의 결정이 본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제 분화 역시 구조적 요인이 지배적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층과의 안면 관계를 두 번째 이유로 꼽고 있으며, 출신 성분의 차이가 세 번째 이유이다. 이 외에 교육 수준의 차이, 개인의 노력 등은 모두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개별적인 요인에 두는 비중은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위치 역시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현재의 구조 내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교육 수준 향상으로는 차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표 3-8〉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과의 관계	거주 지역	개인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2012	23.6	45.5	0.8	1.6	16.3	0.0	5.7	6.5	0.0
2013	31.8	32.6	2	0.8	17.4	0.0	3	14.4	0.0
2014	27.7	29.7	0.7	0.7	22.3	0.0	4.1	14.9	0.0
2015	17.1	43.2	0.7	0.0	15.8	0.7	4.8	15.1	2.7
2016	14.5	42	0.7	0.7	15.2	0.7	2.9	22.5	0.7
2017	15.4	46.9	0.0	2.3	17.7	0.8	5.4	10.8	0.8

〈표 3-9〉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2순위

(단위: %)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과의 관계	거주 지역	개인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2012	2.4	22.8	1.6	2.4	38.2	3.3	10.6	17.9	0.8
2013	3	25	2.3	3.8	39.4	6.1	6.1	13.6	0.8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과의 관계	거주 지역	개인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2014	7.5	21.8	4.8	2	32	6.1	4.1	19.7	2
2015	5.6	21.5	2.1	2.1	37.5	9	9	12.5	0.7
2016	2.9	18.8	2.9	5.1	43.5	6.5	5.8	14.5	0.0
2017	6.2	16.2	0.8	6.2	35.4	7.7	13.8	10.8	3.1

〈표 3-10〉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3순위

(단위: %)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과의 관계	거주 지역	개인 성격	출신 성분	운수 소관
2012	4.9	9.8	4.1	2.5	17.2	13.1	13.9	24.6	9.8
2013	4.5	15.2	4.5	5.3	14.4	10.6	14.4	21.2	9.8
2014	4.1	14.4	5.5	4.1	15.8	11.6	19.9	18.5	6.2
2015	0.7	11	4.8	2.1	9.7	16.6	22.8	22.1	10.3
2016	2.9	13.9	6.6	4.4	10.9	14.6	19	20.4	7.3
2017	3.9	12.4	3.9	1.6	11.6	14	17.8	24	10.9

한편, 장사 경험 및 상거래에 대한 인식 조사에 있어서는 약 70%가 장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해서 시장 매대가 21.9%의 응답률을 얻어 1순위로 꼽혔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자유로운 장사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가 증대해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장사, 소비품, 설립, 고용, 은행 거래 중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는 90.8%가 장사 영역에서의 자유 보장이 급선무라고 응답하였다. 이 외 영

역들에 대해서도 70%를 웃도는 응답자가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아래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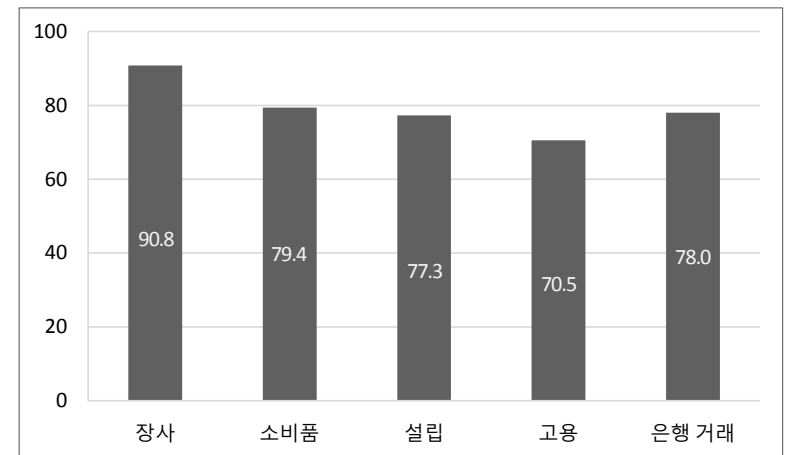
〈표 3-11〉 우선적 상거래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를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본 적 없음
2012	28.2	12	32.5	4.3	7.7	1.7	6.8	6.8
2013	27.8	13.5	36.1	10.5	3.8	3.8	3.8	0.8
2014	23.8	12.9	24.5	9.5	6.8	5.4	5.4	11.6
2015	17.8	13.7	17.1	8.2	6.2	6.8	14.4	15.8
2016	19	11.7	21.9	9.5	2.2	8	8.8	19

〈그림 3-2〉 영역별 자유보장에 대한 인식

(단위: %)



4.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북한 주민들의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 북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한 정책으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60-70%의 높은 비율로 최고 영도자가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고 영도자 다음으로는 당 지도부의 부실함과 무책임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혔다.

2016년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의 제1 원인이 최고 영도자라는 인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의 결과는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12>와 <표 3-13>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근로자 요소, 다시 말해 개인적 요소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분화 이유를 대부분 사회 구조적인 부분과 정치적 영역에서 찾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지도자와 권력층에 대한 불만도 고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2>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1순위

(단위: %)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 영도자	기타
2014	2	3.4	7.4	12.1	0.7	74.5	0.0
2015	2.1	2.1	6.9	15.3	2.8	70.8	0.0
2016	0.7	6.5	10.1	16.7	0.0	65.2	0.7
2017	0.8	3.8	6.9	16.8	0.8	67.9	3.1

<표 3-13>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2순위

(단위: %)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지도부	군부	최고 영도자	기타
2014	0.7	13.1	30.3	40	8.3	6.2	1.4
2015	0.7	10.6	22.5	52.8	4.9	4.2	4.2
2016	0.7	11	19.1	45.6	13.2	8.1	2.2
2017	0.8	13.6	20.8	47.2	12.8	4.8	0.0

한편,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34.4%의 응답자가 외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2.1%의 유사한 수치로 자본주의 도입이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23.7%의 응답자가 경제 관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외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경제관리 방법 개선, 사상성 등 내부적 원인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봤을 때, 국내적·사회 내부적 변화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과 같은 급진적이고 변화가 큰 정책이 북한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별 조사에서도 흥미롭게 나타난다. 35세 미만은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했으며, 35세-55세 미만은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선호하였다. 젊은 연령층은 경제 제도의 혁신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를 희망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현재 제도 내에서의 관리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별 구분 역시 흥미로운데,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계층은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선호함으로써 현재 체제 유지 내에서의 변화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월급이 적은 계층은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체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정리하자면, 현재 체제에 익숙하거나 현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주민들은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같은 부분적 개혁을 원하는 반면, 젊은 세대와 수입이 적은 계층은 자본주의 도입과 같은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는 북한 사회가 더욱 외부에 노출되고, 외부 요인 역시 북한 사회에 영향을 줄 때, 보다 심화되어 내부적으로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한 인식

(단위: %)

	사상성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2014	6	5.4	26.8	26.8	32.2	2.7
2015	1.4	5.5	25.3	37.7	30.1	0.0
2016	2.2	4.3	24.6	37.7	31.2	0.0
2017	3.1	6.9	23.7	34.4	32.1	0.7

5.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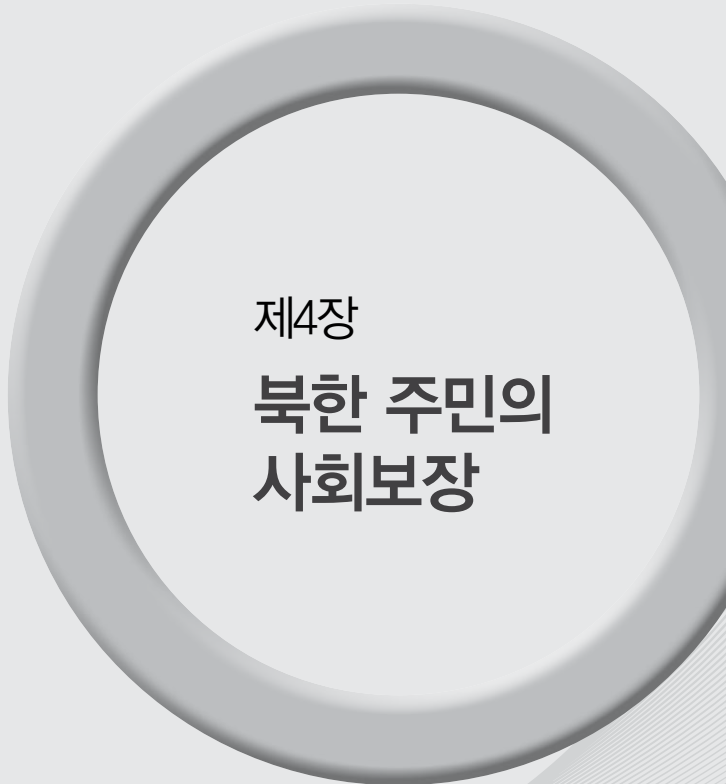
2017년 북한사회변동 조사에서 시장화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자 비율이 급증하며 소매장사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것만으로 북한 내부의 상거래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소매장사가 힘들어진 이유에는 체제 내부에서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기관의 집행과 뇌물로 인한 어려움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위로부터의 억압과 수탈이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시장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약 40% 정도의 시장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며 헝가리, 폴란드 등의 체제 전환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과 벼랑끝 전술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그 강도를 높여 갔으며, 시장경제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북한의 경제 체제도 그 위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거래에 있어 자유보장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장사 등 소매상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여와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제 행위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뇌물이라는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억압적 수탈 구조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인정받을 때만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외국의 영향을 받은 젊은 층이 늘어갈 수

록 변화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변화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단순한 경제논리의 변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북한 사회와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것은 중장년층이었고, 상대적으로 체제에 익숙하고 충성심이 높은 이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는 않았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관리 방법과 운용 방법의 변화를 희망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지지와 뒷받침은 지금까지 많은 내부적·외부적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젊어지고 있는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구 분포로 ‘젊어진다’의 의미가 아닌, 보다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고, 보다 외부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북한의 주민의식 자체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젊어짐은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 나아가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계층 분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계층분화의 원인에 대해 정치적·사회적 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개개인의 노력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는 경제적 계층 분화를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 출신 성분의 차이나 직위, 권력층과의 안면관계와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위치가 결정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구조는 향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거나 그 위기가 더욱 절박해질 경우,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큰 중대한 요소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4장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4장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

1. 서론

이 장에서는 북한 내 사회보장의 실태와 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보장의 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 통일의 형태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의 경우 어떠한 통일이든지 시장화와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 나타날 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 사회보장 제도는 근본적인 구조에서 차이가 크다. 북한은 배급제와 노동의무제를 바탕으로 모든 주민의 생활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시스템은 매우 단순하며 경제·사회정책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반면 남한은 시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일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적 차이들을 고려한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기초적 단계가 현재 북한 사회보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모든 국민에 대해 충분한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데

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선군노선으로 인해 북한 정부는 사회보장을 충분히 제공할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²³ 대신 국가는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배급제 붕괴와 함께 무상의료와 소득보장 시스템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상의료 체계는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²⁴ 소득보장 제도의 상당 부분은 ‘계획’이 작동하지 않아서 형식적 제도로만 존재하고 그 의미를 상당히 상실했다²⁵고 보고되고 있다.

북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일 이후 사회보장 통합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동서의 격차가 적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에 따른 이전지출에 있어 인프라 재건 등에 소요된 지출보다 사회보장성 지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²⁶ 이런 점에서 현재 북한사회의 사회보장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2016년 조사부터 사회보장 실태 파악을

23. 장용석·정은미·정근식·김경민, 『북한 사회변동 2016: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69.

24. 이철수 외,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과도기 이중체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pp. 205~206.

25. 민기채·조성은·한경훈·김아람,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7), pp. 301~303.

26. 독일연방건설교통부의 통일비용 추정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총 통일비용(이전지출) 1조 2,800억유로 중 사회보장성지출이 6,300억유로로 전체의 49.2%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10-통일비용 분야 관련 정책 문서』, 서울: 통일부, 2015, p. 24.)

위한 문항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북한에 거주할 때 받았던 사회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본인 또는 가족의 노령연금(년로연금), 국가공로자연금(공훈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수급경험을 조사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와 무상치료, 노령연금, 국가공로자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등의 작동 여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의 실태를 무상의료와 소득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3절에서는 북한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를,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2절에서 다루는 사회보장의 범주는 무상치료와 노령연금, 국가공로자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등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제도들이다. 3절에서 만족도 분석의 내용은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것과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이다.

2. 북한 사회보장 제도 실태

1) 무상치료

먼저 무상치료로 표현되는 의료보장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무상치료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무상치료가 모든 주민

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로 나타나 보편적 의료보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도층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북한 내 무상치료제가 계층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공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17.2%에 그쳐 과거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적 환대 역시 약화되었고, 과거 공로보다는 현재의 권력이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응답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 의료보장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존에 대내외에 알려진 사실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인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전 주민에게 적용된다는 응답이 극히 낮다는 것인데, 이는 여전히 북한의 차별 진료 행위와 부족한 의료서비스 공급능력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표 4-1〉 무상치료의 적용여부 (2017년)

(단위: 명(%))

구분	적용	미적용	합계
치료가 필요한 모든 주민	33 (25.8)	95 (74.2)	128 (100)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11 (8.6)	117 (91.4)	128 (100)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12 (9.4)	116 (90.6)	128 (100)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6 (4.7)	122 (95.3)	128 (100)
치료가 필요한 노인	6 (4.7)	122 (95.3)	128 (100)
치료가 필요한 여성	9 (7.0)	119 (93.0)	128 (100)

구분	적용	미적용	합계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6 (4.7)	122 (95.3)	128 (100)
당 간부 및 지도층	94 (73.4)	34 (26.6)	128 (100)
국가공로자	22 (17.2)	106 (82.8)	128 (100)

2) 소득보장

북한은 노동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노동능력이 없는 인민²⁷에게는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 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소득보장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해서 급여가 중단되거나 간헐적으로 지급되었고, 이후 지급이 지속된 시기에도 실질 가치가 보잘 것 없는 수준으로 하락해서 지급 여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²⁸

27_ 북한의 사회보장제는 근로자들이 연로하였거나 노동능력을 항구적으로 또는 오랜 기간 잃었을 때, 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그 유가족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이 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노동법제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p. 239.

28_ 민기채·조성은·한경훈·김아람,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pp. 235~236.

다음에서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에서 노령,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노령연금, 근로자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등 소득보장 제도의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1) 노령연금

북한의 <사회보험법>(1946.12.19.), <사회주의노동법>(1978.4.18.), <사회보장<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10.4.), <사회보장법>(2008, 01. 04. 채택)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북한은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에 이른 경우 노령연금²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노동연한을 충족해야 하지만, 노동이 의무화된 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연한이 엄격하게 반영되어 의미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며 수급 연령에 달한 시점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 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노령으로 본인이나 부모님 중에 노령연금을 수급한 경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이 29.0%, 2017년에도 23.5%에 그치고 있다. 조사대상 중에 20대~30대의 북한이탈주민들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역시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0% 정도의 40대 응답자와

29_ <사회보험법>에서는 ‘양로년출금’, <사회주의노동법>(1978.4.18.)과 <년로자보호법>(2007.4.26.)에서는 ‘년로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그밖에 ‘연로보장’, ‘양로연금’ 등 다양한 명칭이 법령과 사전 등에서 혼용되고 있는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근로하지 않을 때 받는 급여를 통칭하는 ‘사회보장금’ 또는 나이가 들어서 받는다는 점에서 ‘연로연금’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자들의 선 이해를 고려하여 남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노령연금의 명칭을 사용한다.

14.5%의 50대 이상의 응답자는 본인이나 부모님이 연금 수급연령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노령연금 수급이 모든 대상자에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지,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된 것인지 는 본 조사의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노령연금의 급여수준에 대한 응답은 현금급여는 7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4%로 가장 높았고, 현물급여는 1일 600g의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값은 통상 ‘국가공로자연금’ 대상자로 분류되던, 과거 화폐개혁 이전 기준으로 60g의 쌀(현물)과 60원의 현금을 지급받던 이른바 ‘600-60’ 대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쌀의 경우 공로가 없거나 부족한 일반 공급대상자들에 해당하는 300g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값들은 직간접적으로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만 응답한 결과로 응답내용의 편차가 매우 커서 신뢰하기 어렵다. 추후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선이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사전략이 요구된다.

다만 2016년의 현금급여 수급수준이 평균 1,800원 정도로 응답된 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근로자의 공식적인 수입이 2~3,000원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공식임금이 실질 생활에 불충분할 정도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노령연금(년로연금)의 수급 경험

(단위: 명(%), g, 원)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수급량 (유경험자 평균)	
				식량 (1일)	현금 (1개월)
2016년	40 (29.0)	98 (71.0)	138 (100.0)	427.0 (n=10)	1803.7 (n=38)
2017년	31 (23.5)	101 (76.5)	132 (100.0)	-	-
합계	71 (26.3)	199 (73.7)	270 (100.0)	427.0 (n=10)	1803.7 (n=38)

앞선 질문에서 노령연금의 경험이 다소 낮은 이유를 설명할 하나의 단초는 노령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노령연금의 정상지급 여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왔고,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은 합해서 13.6%에 그쳤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기에 북한 사회는 노령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기존의 조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데, 기존 연구에서는 노후보장 수준이 매우 낮지만 지속적인 지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를 지지하는 연구도 있는데, 민기채 등(2017)의 질적 연구에서는 노령연금의 금액이 너무 낮아 대다수가 지급여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급받더라도 며칠 사이에 다 소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결국 북한에서의 노령연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낮아서 북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상태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4-3〉 노령연금의 작동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017년	4 (3.0)	14 (10.6)	23 (17.4)	25 (18.9)	66 (50.0)	132 (100.0)

노령연금의 대상별 적용도를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당 간부, 핵심권력기관 종사자, 국가공로자 등으로 나누어 물어보았다. 앞서 전반적인 노령연금의 작동에 대해서는 13.6%만이 작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상별로 나누어 지급여부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최하 19.7%에서 최고 45.7%까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조사 응답의 신뢰도가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주관적인 체감도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수치를 이해하면 좋겠다.

조사결과 노령연금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 노령연금이 사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 노령연금이 협동농장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 노령연금이 당 간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7%, 노령연금이 핵심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 노령연금이 공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 등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일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보다 당 간부와 국가공로자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우선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령연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표 4-4〉 노령연금의 대상별 지급여부 (2017년)

(단위: 명(%))

구분	지급	미지급	합계
은퇴한 노동자	41 (32.3)	86 (67.7)	127 (100.0)
은퇴한 사무원	28 (22.0)	99 (78.0)	127 (100.0)
은퇴한 협동농장원	25 (19.7)	102 (80.3)	127 (100.0)
은퇴한 당 간부	53 (41.7)	74 (58.3%)	127 (100.0%)
은퇴한 보위부, 회안전부 등 핵심권력기관 종사자	56 (44.1)	71 (55.9)	127 (100.0)
은퇴한 국가공로자	58 (45.7%)	69 (54.3%)	127 (100.0)
기타	20 (15.7)	107 (84.3)	127 (100.0)

(2) 공로자연금

북한의 공로자들에게는 국가사회적 공훈에 따른 보상으로 일반 대상자의 노령연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데 이를 흔히 공로자연금이라고 분류해왔다. 일종의 승급형식의 공적연금체제로 간주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본인이나 부모님 중에 공로자연금을 수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5.9%, 2017년에 11.4%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노령연금의 응답자 중에서도 급여수준으로 볼 때 공로자연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다. 즉 공로자연금을 받고 있지만 본인

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로자연금 또한 노후보장수준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수가 너무 작아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어렵지만 2016년 조사에서 현금급여의 경우 1,800원 정도가 평균으로 조사되었는데, 앞서 노령연금의 평균 급여수준 정도에 그쳐서 응답자들이 일반 노령연금과 공로자연금을 크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공로자연금의 수급 경험

(단위: 명(%), g, 원)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수급량	
				식량 (1일)	현금 (1개월)
2016년	8 (5.9)	128 (94.1)	136 (100.0)	806.3 (n=4)	1976.3 (n=8)
2017년	15 (11.4)	117 (88.6)	132 (100.0)	-	-
합계	23 (8.6)	245 (91.4)	268 (100)	806.3	1976.3

(3)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

북한에서는 단기적 산재보상의 성격인 폐질연금과 장기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연금 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³⁰ 본 조사에서 이 두 가지 제도의 수급경험과 급여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제도가 사문화되어 실시되지 않았거나, 아무튼 2016~2017년간 단 1명만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경우 폐질연금을 1,2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답하였는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앞서 노령연금보다는 낮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다. 북한 문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은 “생활비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지불되며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근속노동연한에 따라 40%로부터 60%까지 차이있게 설정되고 있다.”³¹

30_ 기존연구(이철수, 『북한사회복지-반복지의 북한』, 청목출판사, 2003)에서는 〈사회보험법〉(1946.12.19)의 제1조 7항 “질병, 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되었을 때의 연금” 규정에 근거하여 산재로 인한 단기급여를 폐질연금으로 파악하고,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월 이상의 장기급여를 노동능력상실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에 대한 질문을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폐질연금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주의노동법〉의 일시적 보조금과 겹친다. 1990년대 북한에서 발간된 한 제도 해설서에서는 “질병, 부상 등으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때에 주는 보조금”과 “근로자들이 불구 또는 신병으로 노동능력을 항구적으로 또는 오래 동안 잃었을 경우에 주는 사회보장연금의 한 형태”로서의 노동능력상실연금만을 언급하고 있고 폐질연금이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이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

31_ 앞의책, p. 237.

〈표 4-6〉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의 수급 경험

(단위: 명(%), g, 원)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수급량 (유경험자 평균)	
					식량 (1일)	현금 (1개월)
폐질연금	2016년	1 (0.7)	137 (99.3)	138 (100.0)	-	1,200 (n=1)
	2017년	0 (0.0)	132 (100.0)	132 (100.0)	-	-
	합계	1 (0.4)	269 (99.6)	270 (100)	-	1,200 (n=1)
노동능력상 실연금	2016년	1 (0.7)	137 (99.3)	138 (100.0)	-	500 (n=1)
	2017년	0 (0.0)	132 (100.0)	132 (100.0)	-	-
	합계	1 (0.4)	269 (99.6)	270 (100)	-	500 (n=1)

경험자는 적지만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한 주관적인 작동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답변인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은 합해서 3.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는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표 4-7〉 폐질연금의 작동여부 (2017년)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2017년	1 (0.8)	3 (2.3)	18 (13.7)	25 (19.1)	84 (64.1)	131 (100.0)

대상별 적용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폐질연금이 근무중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 폐질연금이 신체적질병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폐질연금이 근무중사망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5% 등으로 전반적으로 10% 이하만이 지급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모름이 70%에 이르고 있어 실제 북한에서 근로 중 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급여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응답자들이 제도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표 4-8〉 폐질연금의 대상별 지급여부 (2017년)

(단위: 명(%))

구분	해당	미해당	합계
근무 중 부상·질병으로 일할 능력을 잃은 노동자와 사무원	13 (10.3)	113 (89.7)	126 (100.0)
근무 중 부상·질병으로 일할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노동자와 사무원	5 (4.0)	121 (96.0)	126 (100.0)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나 사무원의 유가족	12 (9.5)	114 (90.5)	126 (100.0)
잘 모른다	96 (76.2)	30 (23.8)	126 (100.0)
기타	7 (5.6)	119 (94.4)	126 (100.0)

3. 북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1)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국가배급제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의 이른바 ‘인민시책’ 체제들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악의 경제난이 어느 정도 극복된 이후에도 1980년대 이전과 같은 국가사회주의체제는 회복되지 않았고, 시장화와 계층화 현상은 가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과 같은 안정적인 국가서비스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의 사회보장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각각 52.2%, 47.7%에 이를 정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책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은 2016~2017년 전체 응답자의 8.7%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복지시장화와 사경제 활동을 통한 북한주민의 이른바 ‘셀프복지’가 경제난 이후 장기간 지속되었고, 현재 일부 사회보장 급여가 지급되지만 현실적인 보장수준이 매우 낮아 이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된다.

다만 다소 흥미롭게 관찰해야 할 점은 ‘만족한다(매우 만족하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2016년 7.5%에서 2017년 10.0%로 2.5%p 상승했다는 점이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지만 추후 조사에서도 상승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북한 내 사회보장 체계 변화의 새로운 모티브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사

일발사 성공으로 인한 과학기술 노력영웅 등 다수의 국가공로자, 기존의 6.5 공급대상자 등은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10% 전후의 ‘만족한다’는 응답층들의 배경과 답변의 근거에 대한 추적 조사가 요구된다.

〈표 4-9〉 북한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6년	8 (6.0)	2 (1.5)	43 (32.1)	11 (8.2)	70 (52.2)	134 (100.0)	2.01
2017년	7 (5.4)	6 (4.6)	43 (33.1)	12 (9.2)	62 (47.7)	130 (100.0)	2.11

2)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사회보장의 영역별 만족도에서 먼저 무상치료를 살펴보면,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조금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11.3%로 부정적인 의견이 57.1%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12.2%로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약간 높지만 전체적으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반영되어 최근 북한보건의료제도의 경우 일부 지역, 계층별로 부분적으로 정상화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대다수 북한 일반 주민들은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을 보면 여전히 일선 병원의약품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개인이 시장에서 의약품이나 검사재료 등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식 의약분업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표 4-10〉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8 (6.1)	8 (6.1)	40 (30.5)	15 (11.5)	60 (45.8)	131 (100.0)	2.15

3)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34.8%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교육시스템은 국가중심 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 응답비율은 41.7%인 반면, 긍정적인(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응답비율은 23.4%에 그치고 있어 교육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무상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무상교육, 실질적 유상교육’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무상·의무교육 제도를 북한식 사회주의의 가장 우월한 제도의 하나로 선전해 왔지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국가의 역할은 매우 축

소된 형태로 작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크게 손상된 상태이다. 이에 현실에서는 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경제적 역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기 원하고 이를 위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³²

무상교육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계층별, 지역별, 환경별, 소득별로 그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자료가 좀 더 축적되면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 주민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도 의미있는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표 4-11〉 북한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13 (9.8)	18 (13.6)	46 (34.8)	21 (15.9)	34 (25.8)	132 (100.0)	2.66

4)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마지막으로 무상보육을 살펴보면,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비율은 무상교육보

32_ 소성규·박희진·장인숙·정병화·정은미, 『통일대비 복지육구 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p. 76~77.

다도 더 높은 결과인데, 상위학교 진학과 연결되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교육에 비해서, 발달과 성장이 초점이 되는 보육 영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육 역시 부정적인(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 응답비율이 40.9%로 상당히 높고, 긍정적인(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응답비율은 15.1%에 그치고 있다.

무상보육은 무상교육과 비교했을 때 중립적인 응답은 더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무상교육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육에 비해 애초의 기대가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상보육 역시 사실상의 유상화가 장기간 진행되어 이로 인해 빈곤층은 비공식적인 보육료를 부담스러워하고, 부유층은 탁아소와 유치원의 서비스 내용 불만으로 부분적으로 '자가보육' 추구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 30대 젊은 북한세대의 경우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활동, 육아활동, 가사활동을 병행해야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보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이들의 소득활동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각 개별 북한주민이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보육료부담 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성향인 반면 이와 반대로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보육료부담 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설 역시 자료가 좀 더 축적되면 정교한 분석을 통해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표 4-12〉 북한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년	7 (5.3)	13 (9.8)	58 (43.9)	22 (16.7)	32 (24.2)	132 (100.0)	2.55

4. 평가와 시사점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보편적인 배급제 붕괴와 함께 무상의료와 소득보장 시스템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다수의 응답자가 노령연금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 게만 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했고,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도 못 미쳤고,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북한이 자랑하던 인민시책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다. 다만 각 영역별로 볼 때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은 반면,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어 북한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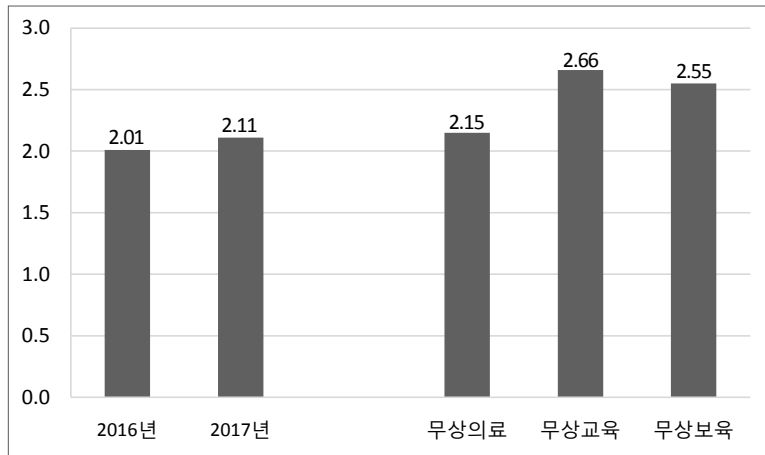
다만 2016년에 비해 2017년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다.

〈표 4-13〉 각 영역별 만족도 비교

구분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2016년	2.01	-	-	-
2017년	2.11	2.15	2.66	2.55

*주: 5점 만점의 동일한 응답항목으로 측정된 결과임

〈그림 4-1〉 2016년~2017년 사회보장 만족도와 2017년 영역별 만족도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사회보장을 넓은 범위의 노동시책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모든 인민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배급제를 비롯한 국가 공급제와 국가사회보험-국가사회보장을 통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의 시장화는 공식 노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비공식 노동을 통한 생활유지 방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공식노동에 기반한 사회보장 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보장의 의미가 침식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시장화된 북한사회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로의 전환이 없이는 증폭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견디기 힘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현대적 법제화의 흐름이 사회보험, 사회보장에까지 확산될 것인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5장
총론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제5장 총론

2017 북한 사회변동 조사 결과 찾아낼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경제적 안정화와 경제 격차의 심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두 키워드의 조합은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과도 맞물려 그 설명력을 더한다. 전반적인 북한의 경제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이 일반 생활과 시장화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분석이다. 오히려 식생활과 의생활의 경우는 특정한 결핍 없이 안정되었으며, 고기 섭취나 의류 구매 횟수 등은 이전보다 증가하여 일부 질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2016년 조사에서도 분석되었던 추세로 김정은 정권 이후 2년여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농림수산업이 안정세에 들어왔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도 소매상행위가 보편화되어 상당수의 북한 주민이 상행위 경험이 있으며, 이의 확대에 대해 강한 요구를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행위 경험은 보다 열린 시장 경제에 대한 수요와 연계되어 현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다 활발한 시장 경제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반 주민들에 비해 여전히 권

력층은 검색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속을 빌미로 너물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체제를 위협할 정도의 갈등 수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몇 년간 계속 이러한 부조화와 불만이 지속된다면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 키워드인 경제 격차의 심화는 주민 내부의 계층 간 격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적 분석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식생활의 양과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여전히 강냉이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율 역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생활에서는 연립주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단독주택, 아파트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상층에서는 집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기기의 이용률에서도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계지출의 구조가 계층별로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데, 하층은 식비 비율이 높은 반면 상층은 의류 구매비와 저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장을 통한 거래의 확산과 정보화 확대가 북한주민들 내부의 계층 격차를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3장의 시장화와 계층분화의 결과에서 더욱 잘 뒷받침되고 있는데, 계층의 분화는 이미 자리잡은 북한 내부의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 자체보다 더 관심있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이들이 계층 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계층이나 지위가 개인의 노력이나 교육 수준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해져있는 구조적 문제, 정

치적 문제 혹은 권력 계층과의 관계에서 계층 분화의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체제의 경직에 대한 문제의식은 젊은 층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년층이 경제 위기 해결의 대안으로 기존 체제 내에서의 개혁·개방을 꼽는 것에 반해, 젊은 층은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이 현재 북한 사회의 경제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급선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4장에서는 북한 사회보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보편적인 배급제 붕괴와 함께 무상의료와 소득보장 시스템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수의 응답자가 노령연금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게만 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에 대해서는 그 개념 자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에도 못 미쳤고,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다.

북한은 사회보장을 넓은 범위의 노동시책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모든 인민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배급제를 비롯한 국가 공급제와 국가사회보험-국가사회보장을 통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점차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북한사회가 새로운 사회보장 체제로

의 전환 없이 경제적·사회적 격차의 심화 및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부록
설문지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북한사회변동 설문조사

NO.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2016년에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의식주 생활, 경제생활, 소비생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에는 2016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 중 만18세 이상인 분들이 참여하게 되며, 약 150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귀하는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북한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가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이며,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설문 참여 동의를 철회하신다면 작성하신 설문지는 폐기 처리됩니다.

귀하는 이 연구 참여시 사례비로 3만 5000원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동준선임연구원 (02-880-8866)에게 문의해주시시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동의함 □에 √표기를 해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정근식

지금부터 '북한에서 살 때'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1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생활했던 모습 중 해당 사항에 ○ 또는 √로 표시해주세요.

먹는 문제	(가)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① 하루 세 끼 이상 ② 하루 두 끼 ③ 하루 한 끼 ④ 한끼도 못먹을 때가 많았다.	(나) 식사를 할 때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 ①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②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었다. ③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었다. ④ 강냉이 위주로 입쌀을 섞어 먹었다. ⑤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	(다)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① 거의 매일 먹었다. ②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④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⑤ 먹어본 적이 없다.
입는 문제	(라)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으셨습니까? ①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 ② 일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 ③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사 입었다. ④ 직접 사 입지 못하고 남이 입던 옷을 얻어 입었다. ⑤ 살 필요가 없었다.	(마)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까? ① 북한산 ② 중국산 ③ 남한산 ④ 일본산 ⑤ 러시아산 ⑥ 기타 외국산	(바) 주로 입는 옷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① 시장(또는 정마당) ② 국영상점 ③ 직매점 ④ 백화점 ⑤ 본인 또는 친척이 외국에서 직접 구입 ⑥ 국가에서 선물 또는 무상배급 받음
살림집 문제	(사) 어떤 형태의 살림집에서 사셨습니까? ① 아파트 ② 하모니카집(연립주택) ③ 독집 ④ 기타()	(아) 거주하는 살림집은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① 국가에서 배정받음 ② 내가 돈 주고 샀음(→ ②-1로) ③ 내가 직접 지었음 ④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음 ⑤ 친척이나 주변 사람한테 받음 ②-1 집을 산 시기: 년	(자) 돈이 많이 있다면 제일 먼저 살림집의 무엇을 바꾸고 싶었습니까? ① 살림집 크기나 방의 수를 늘리고 싶었다. ② 가구, 벽지, 장판 등 살림집 내부를 좋게 바꾸고 싶었다. ③ 위생실(화장실이나 목욕실)을 만들거나 고치고 싶었다. ④ 난방이나 취사 방식을 바꾸고 싶었다. ⑤ 수도 시설을 고치고 싶었다. ⑥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보·통신 환경	(차) 직접 소유하여 사용했던 제품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집전화 ② 손전화 ③ 컴퓨터 ④ 노트북 ⑤ 녹화기 ⑥ DVD 플레이어(씨디알 재생기계)	(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있다 (→ ①-1로) ② 없다	①-1 주로 어디서 인터넷을 이용하셨습니까? (하나만 선택) ①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직장) ② 민간시설 (상업시설 포함) ③ 본인의 집 ④ 이웃, 친구, 친척의 집

동의함 □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하시면 □ 안에 √ 표기를 해주십시오.)

문1-1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남한산 제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1-1-A로)
- ② 없다.(→ 문 1-2로)

문1-1-A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어떤 남한산 제품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많이 사용해 본 순서대로 2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의류
- ② 식품류
- ③ 잡화(화장품, 신발, 시계, 귀금속 등)
- ④ 가전제품(TV, 라디오, 녹화기 등)
- ⑤ 기타()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1-2 귀하가 북한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귀댁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 ③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문1-3 귀하가 북한에서 살 때, 물건을 구입한 후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구입한 곳에 가서 돈으로 돌려 받은 적이 있다.
- ② 구입한 곳에 가서 물건을 바꾼 적이 있다.
- ③ 물건을 판 사람을 해당 기관에 고발한 적이 있다.
- ④ 불만이 있어도 참았다.

문2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북한주민의 계층 비중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 중층, 하층의 총 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주세요.)

상층(%), 중층(%), 하층(%)

문3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 가장 못사는 도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 ① 평안남도 | ② 평안북도 |
| ③ 함경남도 | ④ 함경북도 |
| ⑤ 자강도 | ⑥ 양강도 |
| ⑦ 황해남도 | ⑧ 황해북도 |
| ⑨ 강원도 | |

(가) 가장 잘 사는 도 ()
(나) 가장 못사는 도 ()

문3-1 그럼, 평양을 제외하고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 가장 못사는 시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
| ① 신의주 | ② 청진 | ③ 라선 |
| ④ 혜산 | ⑤ 원산 | ⑥ 남포 |
| ⑦ 평성 | ⑧ 사리원 | ⑨ 개성 |

(가) 가장 잘사는 시 ()
(나) 가장 못사는 시 ()

문4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잘사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 |
|---------------------------|
| ① 중앙당 간부 |
| ② 지방당 간부 |
| ③ 법기관(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간부 |
| ④ 인민위원회 간부 |
| ⑤ 전문직(의사, 교수, 기술자 등) |
| ⑥ 외화벌이 |
| ⑦ 군관 |
| ⑧ 시장 상인(장사) |
| ⑨ 기업소「공장 간부 |
| ⑩ 기업소「공장 노동자 |
| ⑪ 농장 관리일꾼 |
| ⑫ 농장원 |

(가) 가장 잘사는 직업
1순위(), 2순위()

(나) 중간 정도 사는 직업
1순위(), 2순위()

(다) 가장 못사는 직업
1순위(), 2순위()

문5 귀하는 현재 북한에서 부자는 왜 부자고,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정치사상성의 차이 때문에
- ②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 ③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 ④ 가족관계(친척 포함) 때문에
- ⑤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때문에
- ⑥ 사는 지역의 차이 때문에
- ⑦ 개인 성격 또는 자기 노력의 차이 때문에
- ⑧ 출신성분의 차이 때문에
- ⑨ 운수소관 (자기 팔자 때문에)

문6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일상에서 가장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를 한 개만 골라 ○ 또는 √로 표시해 주세요.

- ① 돈벌어야 하는 걱정
- ②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 ③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 (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
- ④ 조직생활
- ⑤ 출세
- ⑥ 자녀 교육
- ⑦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7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편과 부인 중 누가 주로 결정했습니까?

- ①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 ②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③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 ④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문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의 세 시기에 각각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 나 √로 표시해 주세요.

(가) 1994년~ 1999년	(나) 2000년~ 2004년	(다) 2005~ 2010년	(라) 2011년~ 탈북 전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문9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 국가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총합은 북한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직장을 나가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0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장사를 하거나 다른 부업(더벌이)을 했고, 그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입이 북한돈으로 얼마였습니까?
(※ 만일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 아무도 장사나 다른 부업을 한 사람이 없었으면 0원이라고 써주세요.)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장사나 부업으로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1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월평균 수입 중에서 아래 제시된 것들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율로 적어주세요.
(※ 총 100%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 예시: 총합: 100%	
① 먹는 것 (15%)	② 입는 것 (10%)
③ 살림집 (20%)	④ 자녀교육 (10%)
⑤ 저축 (30%)	⑥ 문화생활 (10%)
⑦ 기타 (5%)	

- ① 먹는 것 () ② 입는 것 ()
- ③ 살림집 () ④ 자녀교육 ()
- ⑤ 저축 () ⑥ 문화생활 ()
- ⑦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한 액수의 비율을 써주세요.

문11-1 귀하는 북한에 살 때 자녀에게 사교육(개인강습)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문11-2로)
- ② 없다.(→문12으로)

문11-2 귀하는 북한에 살 때 자녀에게 어떤 사교육(개인강습)을 시키셨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많이 시켜본 순서대로 2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세요.

- 1순위(), 2순위()
- ① 음악(악기 연주, 성악 등)
 - ② 외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 ③ 컴퓨터
 - ④ 체육
 - ⑤ 무용
 - ⑥ 기타 학교과목(수학 등)

문12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 중에서 각종 뇌물로 고인 액수는 얼마나 차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0% 이하 ② 20%이하 ③ 30% 이하
- ④ 40%이하 ⑤ 50%이하 ⑥ 50% 이상
- ⑦ 전혀 없음

문13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한 개를 골라 ○ 또는 √로 표시해주세요.

(※ 위의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문18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 ① 소매장사 (시장 매대장사, 달리기, 행방 등)
- ② 개인 편의봉사 (이동 미용사, 전자제품 수리공, 집 수리공 등)
- ③ 개인 (임)가공 (의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 수공업)
- ④ 식당, 상점 임대 운영
- ⑤ 되거리장사 (차판장사, 도매장사)
- ⑥ 외화벌이 계통 (수출 원천동원이나 대치물자 수입 등 포함)
- ⑦ 돈장사
- ⑧ 샅벌이 (가대기군, 소토지 임시노력, 바다 임시노력 등)
- ⑨ 해외 파견노력 근무 (벌목, 건설, 식당, 의료사업 등)
- ⑩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14 위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문15 그렇다면, 장사 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느 나라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② 중국
- ③ 남한 ④ 러시아
- ⑤ 일본 ⑥ 기타 나라들

문16 위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자신의 사업 수완 부족
- ② 사업자금(밀천)을 마련하는 일
- ③ 장사 물건이나 원료, 자재를 확보하는 일
- ④ 같은 업종의 경쟁자들이나 수입상품과의 판매 경쟁
- ⑤ 한심한 도로, 철도 사정
- ⑥ 한심한 전기 사정
- ⑦ 법기관의 단속이나 뇌물 고이는 일
- ⑧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17 위의 일을 할 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②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③ 누구나 자유롭게 공장이나 기업소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④ 누구나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⑤ 개인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문19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근로자(평범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 ② 관리자(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 ③ 내각(총리, 상, 국가계획위원장 등)
- ④ 당 지도부
- ⑤ 군부
- ⑥ 최고영도자
- ⑦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2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이 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사상성(수령 · 당에 대한 충실성, 자력갱생정신 등)강화
- ② 과학기술 발전
- ③ 경제관리방법 개선
- ④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 ⑤ 자본주의 도입
- ⑥ 기타 () ☞위에 제시된 것들 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써주세요.

문21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받았던 '사회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조금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22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받았던 '무상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조금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22-1 귀하는 북한의 무상치료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대로 모두 표해 주세요.)

- ① 치료가 필요한 모든 주민
- ②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
- ③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 ④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 ⑤ 치료가 필요한 노인
- ⑥ 치료가 필요한 여성

- ⑦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 ⑧ 당 간부 및 지도층
- ⑨ 국가공로자

문23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받았던 '무상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조금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24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 받았던 '무상보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조금 만족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불만족한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문2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아래에 제시된 질문들 중 해당 사항에 ○ 또는 √로 표시해주세요.

<p>(나): 본인이나 부모님 중에 '노령연금(년로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 (나)-1로) ② 없다.</p> <p>(나)-1: 노령연금(년로연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래에 써주세요. (본인이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① 식량 (1일 g) ② 돈 (1개월 원)</p>	<p>(다): 본인이나 부모님 중에 '국가공로자연금(공훈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 (다)-1로) ② 없다.</p> <p>(다)-1: 국가공로자연금(공훈연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래에 써주세요. (본인이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① 식량 (1일 g) ② 돈 (1개월 원)</p>
<p>(라): 일하다가 다친 경우 본인이나 부모님 중에 '폐질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 (라)-1로) ② 없다.</p> <p>(라)-1: 폐질연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래에 써주세요. (본인이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① 식량 (1일 g) ② 돈 (1개월 원)</p>	<p>(마): 일하다가 다쳐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나 부모님 중에 '노동능력상실연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문 (마)-1로) ② 없다.</p> <p>(마)-1: 노동능력상실연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래에 써주세요. (본인이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부모님의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① 식량 (1일 g) ② 돈 (1개월 원)</p>

문26 귀하는 북한의 노령연금(년로연금)이 “은퇴한 모든 노동자나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6-1 귀하는 북한의 노령연금(년로연금)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대로 모두 표해 주세요.)

- ① 은퇴한 노동자
- ② 은퇴한 사무원
- ③ 은퇴한 협동농장원
- ④ 은퇴한 당 간부
- ⑤ 은퇴한 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핵심권력기관 종사자
- ⑥ 은퇴한 국가공로자
- ⑦ 기타 (구체적으로)

문27 귀하는 북한의 폐질연금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친 “모든 노동자와 사무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7-1 귀하는 북한의 폐질연금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십니까?

(해당되는 대로 모두 표해 주십시오.)

- ① 근무 중 부상으로 질병으로 일할 능력을 잃은 노동자와 사무원
- ②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노동자와 사무원
- ③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나 사무원의 유가족
- ④ 잘 모른다
- ⑤ 기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Q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Q2. 귀하는 몇 년도에 어나셨습니까?

(년)

Q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년 월)

Q4. 북한에서 공식적인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 ① 노동자
- ② 농민
- ③ 사무원
- ④ 피부양자(질병으로 노동 불가능, 연로보장 등)
- ⑤ 학생
- ⑥ 군인
- ⑦ 가정부인
- ⑧ 무직 및 기타

Q5.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다
- ②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
- ③ 결혼하였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없다
- ④ 리혼/별거하여 배우자가 없다
- ⑤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38

북한사회변동 2017

발행 2018. 04. 05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자 정근식·조성은·천자현·황정미·조용신
주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4052-4, 874-7304
팩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북한사회변동 2017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사회보장
저자: 정근식·조성은·천자현·황정미·조용신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38]
권말부록: 설문지
ISBN 979-11-961299-7-2 93340 : 비매품
북한 사회[北韓社會]
북한 경제[北韓經濟]
사회 변동[社會變動]
309.111-KDC6
301.095193-DDC23 CIP2018010663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